

제 3 차 한-일 저널리스트 다이얼로그

~미디어의 시각을 통해 본 양국의 상호 이미지~

2014 년 3 월

공동 주최: 일본국제문제연구소／한국국제교류재단
후원: 일본외무성／대한민국외교부
협찬: 주식회사 롯데

서문

본 보고서는 2013 년 10 월에 실시된 국제회의 “제 3 차 한-일 저널리스트 다이얼로그—미디어의 시각을 통해 본 양국의 상호 이미지—” (개최지:힐튼 도쿄 베이)의 요지와 각종 자료를 집대성한 것입니다.

2011 년부터 2012 년에 걸쳐 급속하게 냉각된 한일관계는 양국의 신정부 성립에 따라 “복구”에 대한 기대가 한때 높아졌지만, 2013 년에도 여전히 개선의 단서를 좀처럼 찾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이슈에 관한 양국의 입장차이가 전체 양국간 관계에 파급하는 “종래형”의 구도에 지금까지의 양국관계를 규정해 온 질서에 대해 쌍방으로부터 각각 의의가 제기되는 모멘텀까지 추가되었고, 또 그것이 국제정세의 변동 속에서 증폭되고 있는 것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부 및 민간 모두 상호교류 활동이 이미 상당 정도 축적된 현재 상태에 있어서는 정부 간의 대립이 민간교류를 저해하고 있거나 혹은 일반 수준에서의 상호 이미지 악화가 정부 간의 협력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이항대립적인 설명은 이미 해당하지 않고 한일관계에 관한 모든 관계자가 지금까지의 접근에 관해 재검토해 보는 것이 지금 요구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점을 참고해서 우리 한일 쌍방의 관계자가 미디어, 지식인을 중심으로 어려운 과제(테마)를 정면돌파하는 것, 또 격렬하고도 솔직한 토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환경을 정비하는 것, 그리고 그 위에서 폭넓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과 같은 작업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우라야스에서 개최된 “제 3 차 한-일 저널리스트 다이얼로그”는 이와 같은 “공동이해”에서 출발하여 기획 및 입안을 거쳐 실시된 것이며, 본 보고서에는 그 결과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본서를 읽으시면 한일관계의 형성에 큰 영향력을 가지는 양국의 저널리스트를 중심으로 지식인과 정부관계자들도 포함한 구성 아래, 그리고 기록면에서는 발언자명을 비공개로 하여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는 “채텀하우스 룰(Chatham House Rule)”에 따라 실로 다양한 과제가 논의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양국 간과 각국 내의 여러 관계자 간의 인식차를 조금이라도 메꾸고 상호이해를 심화해 가는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가 내년의 한일국교정상화 50 주년을 앞두고 향후의 보다 좋은 한일관계를 생각해 가는 데에 있어서 의의 있는 일조가 될 것을 염원해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다망하신 가운데 이번 회의를 위해 모여 주신 참가자 여러분,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의 원활한 운영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진력해 주신 관계 각위,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다대한 지원을 해 주신 주식회사 롯데에 깊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14 년 3 월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이사장 노가미 요시지

차례

서문.....	i
차례.....	iii
프로그램	1
참가자 명단	3
발표 및 토론 요지	7
▶ 개회사	8
▶ 세션 1: “동아시아 전략환경의 전망”	8
▶ 세션 2: “한일관계의 미래상 모색”	14
▶ 기조연설	25
▶ 세션 3: “한일교류의 현황과 미래—사회, 문화, 청년교류”	26
▶ 세션 4: “총괄토론”	35
▶ 폐회사	41
▶ 세션 5: “차세대의 주역 젊은 학생들과의 대화” (특별 세션).....	41
발표 자료	49

제 3 차 한-일 저널리스트 다이얼로그 -미디어의 시각을 통해 본 양국의 상호 이미지-

2013 년 10 월 20~23 일

공동 주최: 한국국제교류재단 / 일본국제문제연구소

프로그램

2013 년 10 월 21 일(월)

09:30 - 09:45 개회사

NOGAMI Yoshiji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이사장)
유 현석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09:45 - 12:00 제 1 세션: 동아시아 전략환경의 전망

일본측 발표 「동아시아 전략환경의 전망」

한국측 발표 「21 세기 동아시아의 전략환경과 일본의 길」

토론

12:20 - 14:00 오찬

14: 15 - 17:30 제 2 세션: 한일관계의 미래상 모색

일본측 발표 1 「한일관계의 미래상의 모색」

한국측 발표 「한일관계의 현재와 미래」

일본측 발표 2 「일한 관계 미래상 모색(경제적 측면에서)」

토론

18:00 -20:00 만찬
 기조연설: 이 병기 (주일본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2013 년 10 월 22 일(화)

09:00 - 12:00 제 3 세션: 한일교류의 현황과 미래 - 사회, 문화, 청년교류

일본측 발표 「한일 교류의 현황과 미래 - 사회/문화교류, 청년 교류」

한국측 발표 「한일 청년 교류 -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이 필요하다」

토론

12:20 - 14:00 오찬

14: 15 - 16:00 제 4 세션: 총괄토론

16:00 - 16:15 폐회사

유 현석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NOGAMI Yoshiji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이사장)

16:45 - 18:30 제 5 세션: 차세대의 주역 젊은 학생들과의 대화 (특별 세션)

한국측 발표 「한일 관계의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과 그 대응방안 모색」

일본측 발표

토론

19:00 - 20:30 만찬

※전 세션 비공개(非公開)형식이며, 채텀하우스룰(Chatham House Rule)이 적용되었음.

참가자 명단

※경칭 생략

일본

NOGAMI Yoshiji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이사장
AKITA Hiroyuki	니혼케이자이신문 논설위원
IJIMA Toshiro	일본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IDEISHI Tadashi	일본방송협회(NHK) 해설위원실 해설주간
OTA Masakatsu	교도통신사 편집위원 겸 논설위원
OKONOGI Masao	게이오대학 명예교수 / 규슈대학 특임교수
KAZAMA Shin	후지텔레비전 외신부 편집위원
KANEKO Hidetoshi	마이니치신문 전문편집위원
KIKUCHI Tsutomu	아오야마가쿠인대학 교수 / 일본국제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KUBOTA Ruriko	산케이신문 편집위원
KOHARI Susumu	시즈오카현립대학 교수
SAMEJIMA Hiroshi	아사히신문사 특별보도부 차장
SUZUKI Yoshikatsu	시사통신사 해설위원
TAKAGI Tetsuo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전무이사
FUKAGAWA Yukiko	와세다대학 교수
MORI Chiharu	요미우리신문도쿄본사 논설위원
YAKUSHIJI Katsuyuki	토요대학 교수 / 일본국제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옵서버>

SAIKI Akitaka	외무성 외무사무차관
KANASUGI Kenji	외무성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
ONO Keiichi	외무성아시아대양주국 북동아시아과장
MORIMOTO Yasuhiro	외무성아시아대양주국 일한교류실장
TSURUMA Kensuke	외무성아시아대양주국 북동아시아과 사무관

<담당자>

IIMURA Tomoki
NAKAYAMA Reiko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연구조수

한국

강 찬호	중앙선데이 정치에디터
길 윤형	한겨레신문 도쿄특파원
김 은영	부산일보 선임기자
박 진원	SBS 문화과학부 차장
박 철희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장
박 태경	MBC 팩트체크 팀장
배 극인	동아일보 도쿄특파원 겸 지부장
양 지우	KBS 보도국 사회 2 부 기획팀장
오 영환	중앙일보 기획조정담당 부국장
이 미숙	문화일보 국제부장
이 병선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사
진 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차 학봉	조선일보 도쿄특파원
최 현수	국민일보 군사전문기자
하 태원	동아일보 논설위원
한 상갑	매일신문 편집부 차장
황 영식	한국일보 논설실장

기조연설자

이 병기	주일본국 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	-----------------

<한국국제교류재단 관계자>

유 현석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김 태환	한국국제교류재단 공공외교사업부장
황 오석	한국국제교류재단 도쿄사무소장
문 재승	한국국제교류재단 비서관

한 창희
신 소정

한국국제교류재단 공공외교사업부 대리
한국국제교류재단 도쿄사무소

<옴서버>

배 종인
이 동기
공 형식
곽 정렬
오 경찬
이 종원

주일본 대한민국대사관 참사관
주일본 대한민국대사관 1 등서기관
주일본 대한민국대사관 홍보관
주일본 대한민국대사관 비서관
주일본 대한민국대사관 정무서기관
와세다대학 교수

발표 및 토론 요지

<*이하에 기재된 모든 발언은 발언자의 개인적 견해에 의거함.>

개회사

Yoshiji NOGAMI(일본국제문제연구소 이사장):

한일 양국 모두 새 정권이 출범하였고 각각 새로운 정책을 전개하는 가운데 한일관계는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기 힘든 상황에 있다. 저널리스트와 학계의 식자들이 한일관계의 개선에 어떻게 공헌하고, 또 미디어의 역할로서 무엇이 가능할까. 그것이 한-일 저널리스트 다이얼로그의 중심적인 문제의식이다. 나아가 이번 제 3 차 한-일 저널리스트 다이얼로그에서는 정치, 경제, 안정보장과 같은 테마에 그치지 않고, 한일 양국에 있어서의 사회 및 문화교류, 젊은 세대의 교류와 같은 새로운 측면에서 한일협력에 관해 차세대를 짊어질 학생들도 함께 논의하게 된다. 유익한 의견교환을 나누고 싶다.

유 현석(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한일관계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매스컴의 역할은 지금까지 없을 만큼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다. 양국의 매스컴의 보도는 자국의 국민뿐만 아니라 상대국가의 국민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미디어의 역할이나 양국의 언론인의 균형 잡힌 시점은 매우 중요하다. 2015 년의 한일국교정상화 50 주년을 앞두고 참가자들로부터 발전적인 제안이 이루어져 그것이 새로운 양국관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다할 것을 기원한다.

(사진촬영)

세션 1: “동아시아 전략환경의 전망”

일본측 발표 “동아시아 전략환경의 전망”

아시아의 국제관계 전반을 살펴보면 권력정치가 더욱 심각화하고 있으며, 액션-리액션형의 군비확장경쟁이 아시아에 생겨나고 있다. 그 큰 요인의 하나는 “두 개의 대국”의 불안정성 혹은 불확실성에 있다.

그중 한 나라는 중국이다. 전형적인 “근대화도상국가”라고도 할 수 있는 중국은 큰 자신감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큰 불안을 안고 있는 모순된 존재이다. 그리고, 중국은 조금씩 대륙국가에서 해양국가로 변모하고 있다. 그에 따르는 문제는 중국이 “해양”을 “영토”와 마찬가지로 생각해 “영토”와 같은 배타성을 “해양”에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국제사회에 있어서 해양은 영토와는 달리 국제적인 규칙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이며, 그러한 점에서 중국의 행동에는 의심의 여지가 남는다. 나아가 향후 경제동향이나 권력의 정당성과 같은 국내외에 안고 있는 심각한 취약성이 중국의 대외적인 행동을 불안정하면서도 불투명한 것으로 만들어 갈 가능성도 부정하기 어렵다.

또 하나의 대국인 미국은 오랜 세월을 걸쳐 아시아태평양의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아 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미국을 중심축으로 한 동맹관계가 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의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 지속될 것은 부정할 수 없으며, 향후에도 동맹의 중요성이 높아질

일은 있더라도 약해질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안정된 동맹관계는 중국이 국제적으로 책임 있는 국가가 되는 데에 있어서도 크게 공헌할 것이다. 다만 오바마정권은 아시아 중시 전략 혹은 아시아로의 재균형이라 불리는 정책을 내세워 최근에 주로 양국간관계를 통해 아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일본과 한국은 각각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으면서도 미국과의 군사적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보폭을 같이 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미국 및 중국의 동향은 아시아의 또 하나의 불안정 요인인 북한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중간에는 서로 강한 경계심 혹은 불신감이 존재하며 그것이 북한에 교섭의 여지를 주고 있는 것이다. 또 북한은 주변국가들이 대북한 정책의 연대를 강화하지 않도록 그 한계를 지켜보면서 향후에도 도발행동을 계속해 갈 가능성이 높다.

이상으로 일본과 한국을 둘러싼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면서도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한 가운데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서 한일 양국의 협력은 그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다. 아시아 국제관계의 “저류”에는 민주주의, 인권, 법에 의한 지배를 강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한일 양국은 잊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한일 양국의 협력은 그 흐름을 더욱 강하게 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측 발표 “21세기 동아시아의 전략환경과 일본의 길”

예전에 미국을 방문해 “A People's History of the United States”라는 책으로 100만 부 이상 판매를 기록한 보스턴대학의 하워드 진 교수에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진 교수의 이야기로는 아시아의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이며 인권문제도 중시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일본에 실망을 느꼈다고 하는 것이다.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한국인/조선인들이 심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일찌기 CIA 한국지부장으로 근무한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대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일본의 행동은 매우 우려된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지도자에 대한 신뢰라는 점에서 한국보다도 일본의 리더십에 대해 보다 우려를 안고 있었던 것 같다.

제 2차 아베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아베 수상이 위안부의 강제동원을 부정하고, 나아가서는 도쿄재판의 정당성을 부인하기에 이른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그 외에도 “침략”의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UN에서도 반발이 있었으며, 무라야마담화의 계승 여부를 둘러싼 논의도 일어났다. 또, 아소타로 부수상 겸 재무대신은 개헌문제를 둘러싼 부분은 어려운 점이 많으니 “나치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이야기해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아베 진영은 왜 이와 같은 도발적인 역사관을 표면화시키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제 2차세계대전의 패전으로 인한 피로증후군이라고나 해야 할 현상이 종전 60년의 세월을 지나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한다.

시진핑 주석은 미국에게 “새로운 형태의 대국간 관계”라는 개념을 제창했지만, 이것은 중국이 ‘우리는 미국과 싸울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 이 새로운 대국끼리의 관계 아래에서 경제협력을 하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이 지금의 동북아시아에서 경쟁 및 견제하고 있는 상대는 역시 일본이 될 것이다. 또, 그러한 국면에 있어서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의 핵심으로 한국의 전략적인 중요성이 높아진 것은 아닐까. 그것은 중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며 시진핑 체제의 중국도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하며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과연 일본은 21 세기의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려고 하는가.

최근 한국의 한 연구소의 대표에게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만약 일본이 독일처럼 일찍 과거사의 청산을 완전히 끝내고 대외협력주의로 나아갔더라면 지금 어떤 상태였을까’라고 시험삼아 물어 보았더니 그분은 ‘역사에 만약(if)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일본이 과거사의 청산을 완전히 한 후에 동북아시아 최고의 국가가 되었다면 오늘날 한국이 G20의 회원이 되어 국제적 발언권도 증대된 상황은 아마 없지 않았을까. 또, 중국이 오늘날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대국관계”를 내세우며 고압적으로 나오는 일도 없지 않았을까’ 라는 대답이었다. 일본의 과거사 청산에 대한 자세는 만족스러운 것인 아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한국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는 것을 더불어 지적해 두고 싶다.

토론

세션 1 사회자: 먼저 양 발표자에게 2 가지 점에 대해 묻고 싶다. 첫 번째로 현재 중국이 안고 있는 내정문제, 경제 혹은 사회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한국과 일본에 주는 영향을 포함해 묻고 싶다. 두 번째로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중시 전략 혹은 아시아로의 재균형 전략에 관해 최근의 “내향적(국내만을 의식한)”인 미국의 여론과 오바마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정책경향을 가미하여 생각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영향력을 남기면서도 실제로는 아시아 태평양에 확산해 가는 형태를 취하는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미국의 이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관해 좀 더 의견을 보충해 주었으면 한다.

일본측 발표자: 중국과 미국의 차이를 들자면 미국이 큰 힘을 가졌을 때에 미국의 주변은 매우 안정되어 있었다. 그와 비교해 중국 주변은 불안정한 지역이 많으며 반드시 중국의 의견에 따른다고는 할 수 없는 국가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중국에 있어서 대외정책상의 큰 과제로 남아 있다. 또, 중국의 세계관은 모두 미국에 이야기가 수렴해 가는 경향이 있으며 약간 균형이 결여되어 있다. “새로운 형태의 대국론” 에도 이 점은 뚜렷하며 그 요점은 중국이 “미국과의” 대립을 회피하고자 하는 결단을 내렸다는 점에 있다. 하지만, 이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중국은 미국 이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큰 불안을 일으킬 국가라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의 아시아로의 재균형 전략의 배경에 관해서는 미국측의 사정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사이에 양국 간의 안전보장면 혹은 경제면의 협력을 깊이 하고 있는 나라가 아시아 안에 적지 않게 있다는 것도 지적해 두고 싶다. 그것은 바꿔 말하면 최근 몇 해 동안 중국의 행동이 아시아 여러 국가에 큰 불안을 낳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다.

한국측 발표자: 시진핑 정권이 시작된 후 중국의 국민 1 인당 GDP 는 3000-5000 달러가 되었다. 5000 달러선을 넘어서면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며 체제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기 싫다고 하며 구미에서는 ‘과연 중국은 체제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논조가 뚜렷하다.

중국은 일본에 대해 고압적이지만 한편으로 박근혜정권에 대해서는 매우 우호적이다. 21 세기 동북아시아 전략에 한국을 끌어넣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힘의

원천은 결국 한미동맹에 있으며 그것과 마찬가지로 한일관계도 중요하다. 시장경제, 민주주의, 안전보장, 세계적인 공헌과 같은 측면에서 한일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를 위해서도 역사문제의 진전이 요망된다.

세션 1 사회자:그러면 질의응답을 실시하고자 한다.

한국측 참가자:일본측 발표자에게 질문하고 싶다. 일본의 연구자나 정부관계자에게는 중국을 견제대상으로 보는 측면이 강하다고 느낀다. 중국이 향후 동북아시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도는 없는 것일까.

일본측 발표자:한중일의 협력에 대해서는 일본에도 많은 지지자가 있다. 중요한 것은 중국이 국제적 규칙을 잘 지키는 나라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며 미일동맹이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일본은 한중일 정상회담의 조기개최를 제안하고 있으며, 면밀한 경제적 관계를 진행해 가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다. 일본 내에서 한중일협력에 대한 관심이 낮아진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다.

일본측 참가자:한국측 발표자에게 묻고 싶다. 중국이 한국을 끌어들이는 전략의 일환으로 한중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한미일의 연대에 대한 분단공작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외교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 되지 않는을까. 한국에서 박근혜정권의 근린국가에 대한 안전보장정책과 외교정책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

한국측 발표자:북경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은 양국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내외적으로 전해 주었지만 실은 내용적으로는 그다지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다. 이명박정권이 한미동맹에 기울어져 있었던 만큼 중국과의 관계를 조금 되돌린다는 제스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의 기본입장으로 외교정책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한미동맹에 있다. 한중관계에서 경제적 협력관계의 발전은 한미동맹이나 한미일관계의 저해요인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측 참가자:과감하게 단순화하자면 중국의 대두와 함께 주변국가들은 “빨간 나라” “파란 나라” “보라색 나라”라고 표현해 분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것을 현재상황에 끼워 맞추면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라오스나 캄보디아와 같은 나라가 “빨간 나라”,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파란 나라”, 그 중간인 “보라색 나라”에는 인도네시아와 태국이 해당할 것이다. 현재는 한일 양국 모두 “파란 나라”라고 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장래적으로 북한문제가 없어질 경우, 한국은 과연 무슨 색의 나라가 될 것인가.

한국측 발표자:북한이 존속하든 통일이 되든 한미동맹은 동북아시아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즉, 한국은 계속 “파란 나라”이며, 그 틀 안에서 발전 및 변화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도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한국측 참가자:한국은 중국에 경계심은 가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대시할 **생각**은 없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이 분단국가이기 때문이다. 북한문제를 관리하고, 핵문제를 해결하며, 통일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일본의 인식과의 차이를 낳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이 이미 “파란색”이 아닌 “보라색” 혹은 “빨간색”에 가깝다고 보는 경향이 있을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한국이 진짜 “빨간 나라”로서 생존해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힘들 것이다.

일본측 참가자:북한의 핵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예를 들면 한국전쟁이 다시 발생하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은 일찌기 이 문제가 우려된 키시, 이케다 양 수상의 시대와는 크게 달라져 있다. 그러한 가운데 저널리스트나 연구자가 중국에 대한 전략적 이익의 정의를 조금 더 제대로 논의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측 참가자:미국에서는 대외적 정세에 무관심한 층이 증가하고 있는 듯하다. 시리아 내전에 대한 낮은 관심이나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둘러싼 문제를 보더라도 미국 내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실감한다. 한편으로 중국은 “새로운 타형태의 대국관계”를 되풀이해 외치며 미국과의 관계만을 강조한다. 이처럼 미국은 대외적으로 무관심하고 중국은 미국 이외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문제에 대해 한국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국측 참가자:박근혜정권이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하지 않고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먼저 하고, 게다가 그 석상에서 역사인식문제를 언급한 것이 일본의 눈에는 한국이 마치 친중정권이 된 것처럼 보일 것이라는 것도 이해가 간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의 대북정책면에서의 공통점은 비핵화에 관한 부분만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미국은 설령 문제를 안고 있더라도 향후 50 년간은 계속 세계의 최고강자로 존재할 것이다. 그것을 반영하여 한국은 “파란” 길을 계속 걸을 것이라고 믿는다.

미디어의 경향에 대해 말하자면 아무래도 한국은 미디어나 학계 모두 “동맹” “협력관계”라는 말을 가볍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동맹이라는 무게, 그것이 가지는 군사적 성격에 대해 우리의 의식이 희박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말이 가지는 의미를 정확히 설명하고 왜곡된 이미지를 바로 잡아 가야 될 필요가 있다.

한국측 참가자:한일 양국의 정상회담이 1 년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두 정상에 상대를 만나지 않아도 곤란할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데에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특히 북한과의 관계를 둘러싸고 일본과의 협력관계는 불가결하다.

최근 한국의 신문칼럼 및 사설에서는 한일관계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논조를 많이 접할 수 있으며 한일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때를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면 이와 같은 의견은 일본미디어에서 먼저 나왔고 아베 수상도 회담할 것을 호소했으나 이때에 박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일본의 미디어는 초조해하다가 포기하는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번에는 한국의 미디어가 회담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악순환이 다시 찾아올 것이 우려된다.

한국측 참가자:기본적으로 일본의 매스컴은 중국을 “방금이라도 붕괴할 것 같은 위기에 처한 불투명한 국가”로 보도한다. 그러나 한국의 매스컴은 중국은 금방 붕괴할 것 같은 나라가 아니라 “거품경제 속에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나라”로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 즉, 매스컴의 보도자세가 크게 다른 것이다.

한국은 “균형외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한미동맹을 중시하면서도 중국과 미국의 대립 및 갈등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외교의 기본을 두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정권은 동북아시아의 평화협력을 소프트한 이슈에서부터 시작해 서서히 안전보장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로 진행하려고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한일관계는 긴장하고 대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비 온 후에 땅이 굳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그 위에서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 가기 위한 과도기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일관계 악화의 요인으로 “책임을 취하지 않는 정부 혹은 관료”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 매스컴” “용기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 학자”라는 세 가지가 양국 모두에 있다는 것은 유감스럽지만 지적해 두지 않을 수 없다.

일본측 참가자:최근 미일 간에 2+2 회담(외무 및 방위각료회의)이 이루어졌지만, 2+2 공동성명에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행사에 관한 재검토를 환영한다’라는 표현이 담겨졌다. 그것에 대해 한국의 미디어는 우려의 입장을 표명하고, 과거의 역사문제가 있으므로 2+2 에는 우려가 남는다는 논조도 보였다. 안전보장 문제가 역사문제로 전환되어 버리는 것에는 위화감을 느꼈지만 한국측의 생각은 어떠한가?

일본측 참가자:한국에서는 일본을 비판할 때 독일의 사례를 종종 인용하지만, 서독의 전후역사를 생각해 보면 이웃 프랑스나 영국과의 관계개선에 있어서는 먼저 안전보장면에서 관계진전이 있었음을 지적해 두고 싶다. 서독이 중립이 아닌 서유럽측 동맹의 일원으로 서유럽측의 방위를 분담하는 NATO 의 일원으로서 책무를 다한 것이 신뢰를 키우는 것으로 이어진 것이다.

일본측 참가자:중국은 한국에 대해 우호적이라는 발언이 한국측에서 나왔는데, 홍콩의 신문을 통해 보여지는 중국의 모습은 한미동맹을 분리하기 위해 미국에 대해서는 명확히 위협을 하고, 한국에 대해서도 군사적 위협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소를 지으면서 한편으로는 위협”하는 것과 같은 중국의 외교방식에는 한국도 위협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국이 한미관계의 악화를 요구하더라도 한국으로서는 그에 응할 수 없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대일비판을 강화하는 것으로 미일동맹의 분단에 가담하고 있는 것과 같은 측면이 있다. 한일관계가 악화될 때에는 그 배경에 미중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경향이 보이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한국측 참가자:아시아로의 재균형 정책에 있어서 미국의 중요한 동기는 경제적, 군사적 측면에 놓여져 있다. 미국으로서는 경제의 성장센터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에서 중국이 경제적인 이익을 독점하는 것이나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 모두 간과할 수는 없으며, 그래서 미국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시아로의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려고 할 것이다. 현재 미국의 인터내셔널리즘, 개입주의의 경향은 저하되어 있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변화라기

보다는 시리아문제에 대한 낮은 관심도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개입이 성공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염증”을 반영한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일관계는 기본적으로 복원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서로에게 전략적 이익이 있는 것은 양국의 오피니언 리더 사이에서 공통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정권이 정상회담을 미국과 중국에서 시작한 것을 가리켜 한국의 외교전략이 중국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정상회담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은 한국외교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라기 보다는 불행한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그러한 것이 계기가 되어 정치가나 매스컴, 학자 등이 잘못된 견해를 낸 것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며, 그 연장선상이 현재의 상태가 있는 것이다.

세션 2: “한일관계의 미래상 모색”

일본측 발표 1 “한일관계의 미래상의 모색”

한일관계는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큰 “전환점”에 와 있다. 현재의 한일관계를 전후 최악의 상태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쁘다기 보다는 질적인 변화의 시기에 와 있다. 지금 문제되는 것은 1965 년의 한일조약으로 시작된 현재의 체제가 향후에도 계속될 것인가, 혹은 어떠한 형태로 바뀌어 갈 것인가 라는 것이다.

한국의 공업화와 민주화, 일본의 거품경제 붕괴 등을 배경으로 일본과 한국의 경제관계는 크게 변화해 왔다. 일본과 한국의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관계라는 것은 일본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해 한국이 완제품으로 만들어 중국이나 미국에 수출하는 식이었지만, 최근에는 생산공정 그 자체를 한일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동일본 대지진 후에는 많은 일본의 소재산업과 부품공장이 한국에 진출하고 있다. 삼성의 갤럭시 제품에 대한 부품공급이 그러하며, 닛산자동차와 르노삼성과의 협업이 그러하며, 새로운 국제분업으로 생산공정 그 자체를 공유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현상으로서 광역적인 경제통합이 더욱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한중일의 FTA 만이 아니라 다국간의 다양한 FTA 를 통해 무역이나 투자의 고도의 자유화, 혹은 룰 만들기와 같은 것이 향후에도 진전되어 갈 것이다. 이처럼 한일관계는 질적으로 상당히 변화해 왔으며, 경제분야에서는 정치분야에서의 대립과는 다른 구도가 형성되어 오히려 공통의 이익이 생겨나고 있다.

향후의 시나리오로서 2015 년을 바라본다면 역사마찰은 역시 2014 년 중에는 해소해 두고 싶은 바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2014 년 중에 양국의 정권 사이에서 높은 수준의 어떠한 외교적 합의가 성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상태에서는 쉽지는 않겠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정경분리라는 방침아래 적당한 거리를 둔다는 지혜를 발휘하는 방책도 생각할 수 있다. 10 년, 20 년 후로 화해를 미루고 당분간은 정경분리와 같은 형태로 한일관계가 최악의 사태가 되는 것을 피하는 방법을 찾는다는 셈이다.

또, “중재”를 통한 처리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이 중재를 하는 형태로 한일 양국의 정상을 대면시키는 것과 같은 경우인데, 실은 이것은 계속 미국이 시도해 온 것이며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과거의 문제에 대해 합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종래의 상황이 계속되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정치나 경제 모두 냉각되어 최종적으로는 감정이 충돌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당분간 주의해야 할 것은 한일 간의 명분논쟁에 외국을 개입시키는 것이며, 특히 중국을 이용하는 인상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한국측이 중국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인상이나 일본이 중국과 먼저 짜고 한국을 뒷전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와 같은 우려는 모두 뒤끝이 남는다.

또, 정부나 사법이 한일관계를 파괴하더라도 민간은 잘 해 가야 한다는 각오를 가져야 된다. “위에서 파괴된 한일관계는 아래에서 재건해 간다”는 뜻으로 경제교류를 토대로 하여 문화, 지방교류, 학생교류 등 다양한 면에서의 교류를 유지 및 확대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미디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일부 미디어는 상업주의로 치닫고 있지만, 민족주의를 이용하여 판매이익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미디어의 역할로 본분을 저버리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정치가나 기업가와 다른 “언론인의 금지”라는 것을 발휘하여 미디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한국측 발표 “한일관계의 현재와 미래”

최근의 한일양국관계를 보면 이전보다 힘든 관계라는 것은 누구의 눈에도 자명하다. 양국관계가 이러한 상황에까지 빠진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한일양국관계가 악화된 것에 대해 “왜 그렇게 되었는가”라는 해석이 서로 틀렸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관계악화의 출발점은 2011 년 12 월의 정상회담(개최지:교토)에서 종군위안부 문제가 나온 것에 있으며 그 후로 서로 공식적인 입장만을 이야기만 하는 꼬인 관계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그것보다 조금 후인 작년 8 월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고, 또 천황에 관한 발언을 한 것을 관계악화의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게다가 서로 상대방의 상황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 버린 것도 원인의 하나이다. 한국측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불만, 즉 ‘왜 이렇게까지 사죄와 반성을 요구하는 걸까’라는 불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일본측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언제부터 이렇게 잘난 척하며 일본을 경시하게 된 거지’라고 한국을 보고 있다. 서로에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을 보는 시각도 한일 양국이 크게 다르며, 이러한 인식을 초래하고 있는 감정이 양국이 최근 진행하고 있는 국가 정체성의 재설정 및 재정립과 관련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점이다. 예를 들면, 아베정권에 들어서면서 지금까지의 한국이나 주변국에 대한 온건한 외교, 전쟁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토대로 한 외교를 약한 자세라고 여기고 자학사관을 비판하는 움직임, 혹은 “주장하는 외교”를 내세우는 움직임이 현저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에게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한국에서 과거사 문제가 클로즈업되는 악순환의 구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격차와 문제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것이 미디어의 보도다. 미디어는 결코 “사실”을 만들어 내는 주체가 아니지만, 문제를 더 크고 복잡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의미에서 “사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이다. 최근에는 일부의 문제를 일부러 과장해서 취급한다거나 사실을 왜곡해 전하거나 하는 경향이 서로에게 매우 심하다.

또, 매스컴의 보도를 보면 마치 자국의 “국가대표”를 자처하여 서로 싸우고 있는 것 같은 측면이 느껴진다. 보도기관의 역할은 “민 의”의 입장에서 국가기관이나 권력기관에 대해 비판적인 시점을 가지는 것이며,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언론의 본래의 기능이 아닐까.

최근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를 방문하면 ‘한국과 일본은 행동도 비슷하며 협력해서 말아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그런데도 협력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진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한일의 협력관계는 보다 큰 관점에 서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현재의 교착된 관계를 타파하기 위해 정상회담을 조기에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풀뿌리교류, 경제교류, 문화교류가 동요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2015 년”에 대해서는 한국의 일부에서 1965 년 한일기본조약의 철폐, 혹은 대폭적인 수정을 주장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적어도 한일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공통견해이며 한국정부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는 듯하다. 그것보다도 2015 년에 아베 수상이 새로운 담화를 발표한다면, 기존의 무라야마담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코이즈미선언의 연장선상에 서서 한일관계를 보다 확대해 가는 것과 같은 내용의 담화를 바라고 싶다.

일본측 발표 2 “일한 관계 미래상 모색 (경제적 측면에서) ”

아베노믹스가 시작되고 난 후 한국의 보도는 일본에게 가혹한 상황이었지만 그중에서 2 개만 인상에 남은 기사가 있다. 하나는 ‘한국인은 왜 분노의 감정을 억제할 수 없는 것일까’라는 보도였다. 학교의 교육스타일을 비롯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았는데 너무나도 폭력사건이 많고 갈등이 많은 것은 역시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 아닐까라는 것이 그 기사의 요지였다. 또 하나는 한국은 자주 일본에 대해 “독일인을 본받아라”라고 하는데, 한국에게는 본받아야 할 대상인 그 독일인 대학교수가 ‘한국은 이와 같은 국수주의적인 발상을 멈추지 않는 이상 선진국적인 문화를 구축할 수 없다’라고 지적한 내용의 기사였다. 그러한 기사가 게재되었던 점에서 한국의 미디어도 변했다고 생각했지만,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아베노믹스를 보도하는 기사가 이전과 마찬가지로 “한국을 뭉개기 위해서”라는 내용 일색으로 기억에 남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경제적인 관점에서 한일 양국을 보면 양국에서 지금까지의 냉전시대의 기능적인 접근법이 완전히 한계에 달했다는 사실이 있다. 즉, 오랫동안 한국이 일본의 기술이나 중간재, 자본재에 의존해 있었기 때문에 반일감정을 억제해 왔다는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일본”에 대한 기능주의다. 또, 일본에서 보더라도 냉전시대에는 한국이 발전하고 민주화되어 가는 것이 일본의 이익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다른 아시아 여러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한국에는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 왔다.

이처럼 서로에게 있어서의 기능주의가 무너져 버리면 제어장치가 작동하지 않고 서로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상황이 노골화된다. 이것을 결정적으로 만든 것은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타케시마 상륙과 그 후의 ‘일본의 힘은 떨어졌으니 더 이상 신경 쓸 필요는 없다’는 발언이었다. 그 때에 한국이 자신만만했던 근거는 자국이 정부 주도, 제조업 주도, 재벌 주도의 성장을 계속하고 있었고, 한편으로 파나소닉 등 일본의

전기회사가 모두 매우 힘든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나라가 이긴 것이라고 여기는 의기양양한 분위기였다고 생각하지만, 그 “부작용”이 지금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향후 한일 양국은 서로 새로운 사고시점에 서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일본은 무엇보다 글로벌화를 해야 한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한국이 해 온 것을 참고로 해야 할 부분이 많다. 정보발신력에 관해서도 적어도 영어로 하고 있는 부분은 한국이 빠르며 양도 많다. 일본은 일찌기 대국이었기 때문에 주위에 신경 쓰지 않고 해 왔지만 앞으로는 다운사이징해 가야 하며 그 과정을 관리해 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는 한국시장의 가치도 나올 것이다. 한국시장은 세계의 글로벌 트렌드가 빨리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한국의 가치를 찾고 있는 기업도 많다.

한국에 관해서는 무엇보다 성장전략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형태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성장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미디어에 넘쳐나는 모순된 사고를 정리함에 따라 자신의 목을 스스로 조이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법률지상주의를 지켜 가는 것, 그리고 지키고 있다고 인식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시장의 기능을 유지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토론

세션 2 사회자:먼저 일본측 발표자 1 이 향후의 한일관계에 대해 4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각각의 시나리오의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또, 한국측 발표자로부터는 오부치-김대중의 공동선언을 잇는 새로운 공동선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담겨져야 하는가. 그리고 일본측 발표자 2 에게는 한일 양국에 있어서의 경제협력의 아이디어에 대해 각각 의견을 묻고 싶다.

일본측 발표자 1:개인적으로는 4 가지 모두 같은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일 양국이 화해를 향해 크게 움직이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가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두 번째 시나리오가 가능성으로는 클지도 모른다. 적당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일지도 모른다.

한국측 발표자:2015 년에 한일기본조약/국교정상화 50 주년을 맞이하는데 현재의 상태인 채로는 서로가 “함정”에 빠져 버린다는 위기의식은 한일 쌍방에 존재할 것이다. 2015 년에 모든 문제를 일괄타결하자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 보다 현실적으로는 양국의 현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시각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역사문제와 영토문제가 일체화되고 있는데, 각각의 이슈를 분리해서 대응하는 사고가 요구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본측의 배려도 필요하다. 야스쿠니 참배를 비롯하여 자신들의 행동이 다방면에 끼칠 영향에 대해 잘못 파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본에는 요구된다.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서로가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도록 한다면, 이 이상은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며 충분히 상호 간에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영토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해결책도 있을 수 있는 것이며, 혹은 그것이 최상의 해결책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문제를 하나씩 내년 무렵까지 정리하여 그것을 토대로 하여

2015 년에 공동선언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계속해 가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양국관계의 증진만이 아닌 “일본은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적 통일을 명확히 지지한다”와 같은 문구를 넣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 바란다면 지역의 안정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을 바라고 싶다.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일본이 함께 행동할 수 있는 분야는 많으며 기후변동, 환경보호,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평화유지활동 등 말 그대로 산적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에 이바지하는 양국관계의 방향성이 2015 년에 걸쳐 나타난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측 발표자 2: Give and Take 의 관계가 없으면 경제협력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게 된 후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업의 비즈니스환경, 고용을 중심으로 생각하여 양쪽에게 좋은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 이상은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일본의 상사나 은행이 한국의 엔지니어링기업과 손을 잡는 등 시장이 가급적 기능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다. 그때에 포인트가 되는 것은 역시 인재이다. 현재, 일본의 회사들은 매우 많은 한국인을 간부후보생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인적자원의 공유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재해에 대한 대비라는 점에서도 한일 양국의 보완성은 높다.

세션 2 사회자: 그러면 질의응답을 하고자 한다.

한국측 참가자: 과연 저널리스트는 “사실” 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 을 전하는 노력을 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이 “사실” 인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저널리스트는 모든 사항에 대해 “사실” 을 점검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왜 한국 국내에서 저만큼 우려하는 소리가 나오는가 개인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다만 집단적 자위권이 한국과 직접 관계는 없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때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중국이라고 한다면 그 경우 한국도 어쩔 수 없이 관여하게 된다.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우려되고 있는 것은 집단적 자위권에 의해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강화되어 그것이 중국의 군비확장을 더욱 초래하는 형태로 이어져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으로 한국에도 위험이 미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이 아니며 “나머지” 부분은 잘 모르겠다는 것이 솔직한 의견이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검증해 갈 필요가 있다.

일본측 참가자: 얼마 전, 일본신문협회상이 발표되었는데 기획부문에서는 영토문제에 관한 2 개의 기사가 수상을 했다. 하나는 홋카이도신문의 연재기사로 러일간의 북방영토문제를 284 회에 걸쳐 연재한 것이다. 또 하나는 산인쥬오일보와 류큐일보의 합동기획으로 타케시마와 센카쿠를 끼고 있는 지역신문이 하나가 되어 이 문제를 생각하는 내용이었다. 이 두 개의 기사는 지역에 밀착한 기자가 장기간에 걸쳐 취재한 스타일이 공통된 점이다. 지역주민의 시점에서 국제문제를 다룬 점이 참신하다고 평가되어 수상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미디어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일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달에 산케이신문과 아사히신문이 모두 위안부문제의 기사를 게재했다. 내용은 차치하고 흥미 깊었던 것은 아사히신문의 기사에 대한 반응으로 ‘잘 조사하여 취재한 것은

알겠지만, 20 년 전의 문제를 지금 다시 파헤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국익과 아시아의 안정으로 이어질 것인가'와 같은 비판이 많았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일본이 우경화하고 있다고 자주 이야기하지만, 일본의 독자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며 문제에 대한 회답이나 해결책에까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냥 사실을 나열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다면 지금 20 년 전의 역사를 써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도 가지고 하나의 “패키지”로 의견을 내지 않으면 역사문제는 더 이상 진전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일본측 참가자:미디어의 역할이나 책임을 생각해 보면 말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신중함이 없어지고, 말이 가지는 의미나 말이 가지는 힘에 대해 너무나도 무덤덤해져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역사인식은 입장이 바뀌면 다른 것은 당연하겠지만, “바른 역사인식”이라는 말을 사용한 순간 “자기의 역사인식은 바르며, 너희의 역사인식은 틀렸다”는 뉘앙스가 나와 버린다. 조금 더 말이 가지는 뜻, 말이 가지는 힘에 대해 민감해야 하지 않을까.

한국측 참가자:요즈음 제휴관계에 있는 일본의 신문사와 합동으로 토론회를 가질 기회가 있었는데, 대마도의 불상도난사건을 둘러싼 논의로 떠들썩했던 것이 기억에 남아 있다. 그때까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공동기획으로 상대측의 의견을 소개하는 형태로 협력이 진행되어 왔는데, 불상사건과 같이 양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입장이 크게 달라진 순간부터 서로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문제점이 부상한 것이다. 그 후로는 무언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여타 미디어와는 조금 다른 발상, 태도로 보도할 수는 없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미디어에 있어서의 말의 사용법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경 쓰기만 하면 해결될 문제라고는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서로의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있다. 한국측의 집필자가 원고에 “침략”이라고 써도 일본어로 번역되는 단계에서 “진출”이 되는 일도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일화를 접할 때마다 서로 이해하는 과정에서의 대화의 중요성을 실감한다. 이것은 파고들면 양국의 교육제도에까지 관계되는 복잡한 문제이지만, 대화를 통한 모색은 어떠한 형태로든 현실의 지면에도 반영할 수 있고 그것이 결국은 독자의 이익으로도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측 참가자:어떻게 하면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축소시키는 일도 없이 한일관계의 해결에 공헌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 섰을 때, 주로 4가지가 그 “기준”이 된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포퓰리즘”이다. 대체적으로 정치가라는 것은 포퓰리즘의 안에서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매스컴이나 연구자도 포퓰리즘의 지향에 휩쓸리는 경향이 있다. 전반적으로 포퓰리즘이라는 것을 조금 더 비판적으로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감정”에 관한 문제다. 감정적인 언동이라는 것은 까다로운 사고가 필요 없다는 의미에서 가장 “하기 쉬운” 것이다. 한국에서는 독도문제가 고조될 때마다 ‘해병대를 독도에 주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것은 울분이 사라지고 시원한 느낌을 준다는 의미에서 감정적으로는 “인기”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감정을 지나치게 앞세워 버려서는 이성적인, 전략적인 사고가 마비되어 한일관계를 더욱 어렵게 해 버린다는 점이다. 따라서 신문은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 같은 보도방법은 자제해야 하며, 이것은 정부나 연구자도 마찬가지다.

셋째는 한국과 일본은 국제관계를 보는 시점 및 시각이 다르다는 점이다. 앞서 나온 한국은 “빨간 나라”냐 “파란 나라”냐라는 논의가 재미있었는데 본질적으로 중국을 보는 방법이 다른 것을 서로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중국을 대하는 인식만이 아니고 국제관계 전반에서도 마찬가지라 하겠다. 서로가 놓인 입장을 이해함에 따라 국가전략이나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는 것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 변경은 일본이 중국을 비롯한 국제관계의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이며, 먼저 반대부터 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전략의 차이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네째, 현재 한일관계의 갈등을 초래하는 큰 요인의 하나로 국가단위로 색깔을 나누는 사고가 있다는 점이다. 한국이 하나까 일본은 반대한다, 일본이 한 것이니까 한국은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예를 들면 올림픽 개최가 도쿄로 정해지기 직전에 일본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조치가 발표되었다. 그것에 대해 실제로는 한국은 올림픽의 도쿄개최를 지지하고 천성표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쿄올림픽 개최에 물의를 끼이기 위해 한국이 획책한 것과 같은 인상이 형성되어 버렸다.

이처럼 포퓰리즘, 감정, 전략의 차이, 국가단위의 색깔나누기와 같은 문제를 비판적으로 여기고 극복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적어도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한국을 비난하면 매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나쁜 방향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측 참가자: 한국 특파원들이 일본에서 지내는 임기는 평균 약 3 년인데 임기를 마치고 빨리 귀국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다. 그 이유로 특히 작년 8 월 이후부터 써야 할 기사의 분량과 근무시간이 늘어나 체력적으로 힘들다는 사정도 있다.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일본특파원들은 마음이 지쳐 버린 듯 하다. 즉, 최근의 한일관계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일본에서 느끼는 일본”과 “한국에서 본 일본”에 큰 온도차를 느껴서 당황스럽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일본측의 반드시 우익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발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한국에 전해지는 순간 보도를 통해 대서특필되어 일본은 우경화된 나쁜 나라라고 공격일색이 된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자신은 그런 식으로 글을 쓰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어도 점차 그쪽으로 이끌려 버리는 스트레스에 노출된다.

일본을 살펴보면, 아베정권이 출범했을 때에 일본의 극단적인 우익세력을 진정시키고 한일관계의 분위기도 바꿔 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한국특파원들은 모종의 기대를 안고 있었지만, 아베 수상의 말과 행동은 결과적으로 그것을 뒤엎는 것이었으며, 일본에 오래 있을 수록 그러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즉, 기대감과 배신당한 감각이 되풀이됨과 동시에 기사에 대한 반응도 되돌아오므로 결과적으로 일본을 중시하는 국제파 기자들은 설 곳을 잃어 가는 것과 같은 근심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 주재하는 특파원에게 있어 도쿄의 분위기와 한국본사의 인식의 차이는 머리가 아픈 문제로 남아 있다.

한국측 참가자: 며칠 전 제주도의 남부해역에서 한미일 3 개국이 공동으로 수색 및 재난구조훈련을 실시했다. 한국 국방부는 당초에 이 훈련을 매스컴에 공개해야 할지 어떨지를 두고 고민했다고 한다. 한일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군사연습 및 훈련과 같은 민감한 영역에서 공동으로 작업하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번 훈련은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었고 1 개사를 제외한 모든 신문이

이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일관계에서 미디어가 자극적으로 정부를 대변하는 것 같은 역할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그것은 때와 경우에 따르는 것이 아닐까. 특히, 양국에게 공통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즉, 한일 양국 간에는 외교분야에서 대립은 있더라도 군사분야에서는 협력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국방부 담당기자들**속에서**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미디어는 한일 양국의 대립만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에 이바지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다.

한일 양국의 정보교류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의 협력이 보다 진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자가 대부분이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한일 양국 간에 협력할 수 있는 여지는 크다. 주일 미군기지, 주한 미군기지의 역할과 같은 부분에서도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한국 국방부는 집단적 자위권을 이유로 일본이 도를 넘은 행동을 취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본다.

일본측 참가자: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국의 보도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다. 10 월 18 일의 참의원 본회의에서 질문에 답한 아베 수상은 위안부에 대해 ‘글과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힘든 일을 겪으셨던 분들을 생각하면 매우 가슴이 아프다. 나의 생각은 역대의 수상과 변함이 없다’라고 발언했다. 이것은 아베 수상의 일관된 자세이지만, 그러한 아베 수상의 인도적인 측면이 한국에서는 왜 보도되지 않는지 의문임과 동시에 불만으로 생각한다.

9 월말에 방한한 헤이글 국방장관과 박대통령이 회담했을 때에 ‘아베 수상은 위안부에 관해 사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 모욕을 주고 있다’는 발언을 하였으며, 이것은 일본측에 있어서 매우 쇼킹했음과 동시에 한국측의 인식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아베 수상은 제 1 차 정권시에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으며 매우 강한 반발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후에는 자세를 수정하여 무라야마담화에 대해서도 답습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한국의 인식은 조금 어긋나 있으므로 “계속되는 정보의 업데이트 작업”이 요망된다.

한국측 참가자: 아베 수상의 위안부 관련 발언은 분명히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관료나 정치가의 다양한 발언과 행동, 그리고 조금 물러섰나 싶으면 또 나와서 자극하고 다시 도망가는 식이 되풀이되어서 결과적으로 불신감은 보다 깊어진 것이다.

일본측 참가자: 최근 한국의 연구가에게 2015 년을 향한 한일관계의 개선방안에 관해 집필을 의뢰하여 일단 승낙을 얻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고 하면서 사퇴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 일을 계기로 현재 한국의 언론공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어쩌면 일본에 관해 글을 쓸 때 필자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한국측 참가자: 5, 6 년 전에 한일관계에 관한 회의에 참가했을 때에 한일 양국의 견해가 날카롭게 대립한 것은 “북한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라는 점이였다. 당시의 한국이 진보정권이었던 것도 있어서 양국 정부 간에는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큰 차이가 있었다. 그때에도 이러한 차이가 한일관계 대립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양국의 미디어 관계자가 다양한 논의를 전개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되고 대북정책에서의 대립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이 있다. 즉, 현재의 한일 양국 대립은 종래에 이야기되어 온 것과 같은 대립의 구조로는 커버할 수 없고, 조금 더 깊은 곳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그 원인으로 주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 번째로 한일 양국 간에 있는 전략적 입장의 차이다. 서로의 입장과 인식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보다 깊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현재의 한일관계가 양국의 공통 및 공동목표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문제가 클로즈업되었을 때에는 북한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서로의 역할을 어떻게 할지와 같은 공통의 관심사가 있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일본측에서 전후의 보상, 경제협력자금 등을 어떻게 할지 혹은 한반도의 통일 프로세스에 어떻게 관여할지 등 지금은 흐지부지되어 버린 문제를 서로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세 번째는 그러한 것들을 이끄는 리더십의 문제다.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양국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결국 리더십이다. 그 작업이 아직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한일관계에 관해 과잉한 기대를 가질 필요는 없으며, 현실을 현실 그대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현실적인 인식을 토대로 하여 그 위에서 공동의 목표를 만든다는 것이다.

일본측 발표자의 경제관계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 간다는 시점에는 공감한다. 분명히 몇 년 전부터 한일 양국의 경제관계에는 산업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한국의 소프트웨어산업, IT 산업을 중심으로 하여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성공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을 전후로 하여 한국에 대한 투자의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그러한 경제관계의 변화에도 미디어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거기에서부터 다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미디어가 바로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관계의 변화에 의해 구축되는 새로운 질서에 주목하고 그 형성에 하나의 역할을 맡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즉효성”이 높고 착수하기 쉬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일본측 참가자: 외교나 정책결정은 복잡기묘한 것으로 결론은 하나로 지어지지만 정부 안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정책결정 중의 복잡함, 미묘함을 어떻게 전해 가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우경화”처럼 어떤 현상을 하나의 말로 꼬리표를 달아 버리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던 것처럼 도쿄에 있는 특파원이 자신은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본국에 전달하기가 어려워져 버리기도 한다. 그것이 즉, “외교문제의 내정화”라고 생각한다. 그 전형적인 예가 이란 핵문제로 “외교문제의 내정화”가 초래한 어긋남으로 인해 10 년은 해결이 늦어져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다. 실은 2003 년에 한 번 기회가 있었고 당시의 교섭담당자였던 지금의 로우하니 대통령로부터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멈춘다는 제안까지 나왔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부시정권은 핵의 평화이용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NPT 의 권리도 박탈하는 강경자세로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꼬여 버린 것이다. 실제로는 당연히 국무성 안에서 온건한 해결을 바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당시의 백악관은 강경파였다. “강경파 사이클”이라는 말이 있는데, 양국의 강경파와 강경파가 서로 맞받아쳐 확대되는 상황에 제동이 걸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정책결정에는 매우 복잡한 요소가 얹혀 있고 다양한 플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그 복잡함을 전함으로 해서 독자들이 바른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도 미디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한 복잡함을 서로 전해 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세션 2 사회자: 그러면 여기에서 각 발표자로부터 코멘트를 받고 싶다.

일본측 발표자 2: 역시 서로 민주국가인 이상 유연성과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고, 다양한 의견에 대해 관용한 자세를 갖는 것을 출발선으로 절대 지켜야 한다. 이것은 경제의 경우에도 해당하는 것이며 다양성이 없는 곳에서는 창조성이나 벤처도 탄생하지 않는다.

일본에는 혐한론자가 있는 한편, 여전히 한국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각각의 견해를 가지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혐한데모가 있을 때 외국인의 배척은 민주국가로서 부끄러운 것이라고 반혐한 데모도 실시된 것이 한국에서는 그다지 보도되지 않았던 것 같다. 뉴스위크지에 따르면 자녀가 일본국적을 가진 프랑스인 기자가 ‘일본이 만약 우경화되면 어떻게 하지’라고 걱정이 되어서 신오쿠보에 취재를 갔는데 반혐한 데모하는 모습을 보고 안심하고 돌아왔다고 한다. 그리고, 아마 한국에서도 국내에서는 서슴없이 이야기를 못하지만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서로 가지고 있는 자유로움이 경제협력의 원천이기도 하다. 우선 이러한 점에서 노력하는 것이 최대의 경제협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측 발표자 : 일본측의 발표를 **들었으니** 한국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일본과 비교해 가장 다른 것은 매우 글로벌화되어 영어가 유창하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의 공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의 교육에 돈을 쓰느니 차라리 미국으로 유학시키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한 흐름은 금융위기 후 보다 뚜렷해지고 있다. 그러한 젊은 세대가 귀국하여 한국의 글로벌화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또, 한국이 외국에 진출할 때에는 국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재벌이 주도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살아 남아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은 어딜까를 생각했고 결과 중앙아시아와 동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일부 등 일본의 기업이 진출하지 않은 곳에 가서 시장을 개척하고 그 결과 높은 경쟁력을 얻었다. 실상으로서의 한국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개별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한국은 통상대국과의 사이에 FTA 를 체결하는 전략을 취해 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다. 따라서 일본과도 높은 수준의 FTA 를 체결하고자 하지만 일본과는 농산물 관계에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정이 있다.

또, 사법과 미디어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사법의 판단을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 하면 그것은 어렵다. 또 일본에서는 한국은 무법국가로 상황에 따라 판결도 바꾸는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도 아니다. 한국의 징용공 문제에 대한 판결문제의 본질은 한국이 이른바 너무나 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너무나 법률을 지키는 나라가 된 것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즉,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아무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확대되어 버린 것이다. 한국정부가 사법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고 무엇보다도 미디어가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이 판결이 과연 1965 년의 기본조약의 정신과 합치하는 것인지, 한국의 상황이 변했을 때 재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지, 한국정부가 충분히 일을 해 왔는지, 이러한 관점에서 매스컴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사법부의 판결은 바꾸지 못하더라도 일정한 영향을 줄 수는 있다.

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일본은 한국정부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한국이 조직적으로 계획하여 도쿄올림픽을 표적으로 정해 방해하는 것과 같은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이 문제의 원인은 추석 시기와 올림픽 후보지

선정시기가 겹쳐진 것에 있으며, 수산물 수요가 높아지는 이 시기에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지는 않을까라는 여론이 높아져 있었다. 국민은 정부의 조사를 믿지 못하고 그로 인해 한국의 수산물까지 팔리지 않게 되자 한국정부는 부득이하게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아베 수상의 자세가 취임을 기점으로 변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미디어의 견해는 여전히 고정되어 있고 “아베 수상은 우익이므로 나쁘다”는 논리로 시종일관하고 있다. 확실히 이 점은 문제이지만, 아베 수상이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우익적인 공약을 다수 제시해 온 것도 또한 사실이다. 그 이미지가 지금의 아베 수상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겠지만, 참의원선거 후의 아베 수상의 행동은 매우 자제되어 있으며 한국의 미디어도 이러한 상황변화를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측 발표자 1:중국에 대한 인식에 관한 논의를 듣고 조금 위화감을 느꼈다. 일본인과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견해에 차이가 있는 것 자체는 분명히 그렇지만, 한국의 중국을 보는 관점에는 특히 북한을 관련시켜 생각할 경우,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가면 언젠가 중국이 북한을 버리고 한국편이 되어 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조금 안이한 생각이 강하게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1987년 5월에 덩소평과 김일성이 회담했을 때의 기록에 덩소평은 김일성에게 ‘우리 중국의 목적은 하나, 그것은 한반도의 통일이다. 하지만 그것은 장기적인 과제이고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다고 되어 있다. 그 후에 시간이 경과하는 가운데 표현의 방법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즉, 중국인은 한반도를 하나로 보고 있으며 그들 나름의 균형외교를 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한반도가 통일되어 가는 것, 그리고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의 영향 아래로 들어오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한국의 중국을 바라보는 인식을 예로 들었지만, 이러한 장기적으로 사물을 보는 것은 아무래도 일본인이나 한국인이나 모두 서툰 것 같다. 조금 전에 “이란의 핵개발문제는 10년 뒤쳐졌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일본과 한국이 실패하면 여기에서 역시 10년 뒤쳐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베 및 박정권이 출범하면서 양국관계가 조금 더 매끄러웠더라면 이 기간도 단축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고충이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일 것이다.

일본측 참가자:작년 가을의 회의에서는 “한국에 있어서는 감정이 헌법보다도 중요하다”는 발언을 들었다. 즉, 국민감정이 헌법보다도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일본측의 인식과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양국관계의 어려움을 실감했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논의가 깊어짐에 따라 보다 성숙도도 더해진 것처럼 느껴진다. 논의가 관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측 발언에 있었던 “국방관계자 간의 분위기는 그렇게 험악하지 않고 협력분야도 있다”라는 지적이다. 예를 들면 중단된 한일 양국의 GSOMIA(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교섭을 보더라도 서로 방위관계자 간에서는 합의한 것이 정치의 힘으로 인해 여러 가지가 힘들게 된 측면이 있다. 그러한 군사 및 안전보장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는 것이 재인식되면 다른 분야에서도 노력을 쌓아 가는 것이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세션 2 사회자:한일관계의 개선은 결국 쌍방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늘의 세션이 2015 년을 향해 가는 데에 있어서 해결법을 모색하는 실마리 중 하나가 되기를 기대하고 싶다.

기조연설

이 병기 (주일본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

지금은 실로 글로벌 미디어의 시대가 되어 전 세계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을 나누고 있으며 대외관계의 측면에서도 매스컴의 영향력과 역할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일 양국 저널리스트들의 교류 및 의사소통은 양국 간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관계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일관계는 업앤다운을 되풀이하면서도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고 양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2 국간 관계의 하나를 이루고 있다. 작년의 양국 간의 교역금액은 1032 억 달러로 일본은 한국의 2 위, 한국은 일본의 3 위 무역상대국이며, 일본의 한국에 대한 투자액은 과거 최대인 45 억 4000 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양국 정부 및 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국 사이에는 인식의 차가 남아 있으며, 국교정상화 50 주년을 앞둔 지금도 과거문제와 역사인식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감정의 악화와 함께 양국관계가 경직되어 버리는 현실이 있다.

우호와 협력방향으로 진행되다가도 민감한 문제가 발생하면 후퇴해 버리는 악순환을 끊고, 신뢰를 토대로 한일관계를 안정시키는 것이 박근혜정권의 외교정책 목표 중 하나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웃 나라로서의 공동체의식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다. “나는 나, 남은 남” 과 같은 대립적인 시각이 아니라 “우리” 라는 공동체적 시점으로 접근해 간다면 복잡한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일 양국은 공생의 파트너관계를 향해 가야 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안전보장상의 위협은 물론이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 성장전략의 실현 및 고용불안의 해소, 에너지 수급문제 등 공통된 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서 미래에 대비해 가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진전과 함께 매스컴의 영향력, 그에 따르는 책임도 더욱 증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 기기의 발달과 SNS 이용자의 증가에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미디어가 되어 다양한 정보로 넘쳐나고 있다. 지나친 감정적인 메시지가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세대에서는 반일과 혐한감정을 부추기는 듯한 도구로 되어 있다. 이처럼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메시지가 홍수처럼 넘치는 가운데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한 정보에 대한 수요는 지금까지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

현재, 한일관계가 매우 힘든 시기에 있다고 하지만, 이와 같은 시기일수록 매스컴과 저널리스트 여러분은 양국 간의 따뜻하고 밝은 뉴스를 발굴하여 소개해 주셨으면 한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삼아 양국 저널리스트 간의 이해가 깊어지고 폭넓은 공감의 형성되며 나아가서는 그것이 내후년의 국교정상화 50 주년을 앞둔 한일관계의 증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세션 3: “한일 교류의 현황과 미래—사회, 문화, 청년 교류”

일본측 발표 “한일 교류의 현황과 미래 - 사회/문화교류, 청년 교류”

현재 일본과 한국이 어떻게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지, 즉 서로의 인식에 대해 정리하고 싶다. 먼저 사람의 흐름을 보면 2013 년에 들어서면서 한국에서 일본으로 오는 사람의 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한편,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사람의 수는 격감하고 있다. 하지만, 8 월 이후에는 오염수 문제의 여파로 인해 한국에서 일본으로 오는 사람의 흐름도 적어지고 있다. 이것을 보는 한 역사인식이나 영토문제의 영향은 그다지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자세, 적어도 구체적인 행동에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중국인의 동향을 보면, 중국에서 일본으로 오는 사람의 수는 줄었고 한국으로 가는 사람의 수가 50% 증가, 70% 증가와 같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을 가리켜서 관광업계에서는 중국인이 일본에 가는 대신 한국에 가고 있다고 단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요미우리신문과 한국일보의 합동여론조사에 따르면 “상대를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감정에는 지금까지와 큰 변화를 볼 수 없었지만, 일본인의 한국관은 3 월의 조사에서 한꺼번에 20 포인트나 낮아졌다. 이것은 협한적인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초래한 것은 무엇인가. 먼저, 양국 정부의 발언에 민간인이 매우 민감해지는 경향이 강해져 있다. 최근 1 년 동안 한국정부나 일본정부 모두 상대 정부에게 말하려고 한 것이 결국은 상대국의 시민을 자극하는 일이 많았다고 생각한다.

일본에서 보면 타케시마나 츠시마의 불상도난문제를 비롯한 사건이 있었으며, 또 박근혜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미국에 가서까지 일본 혐담을 한 것에 따라 “고자질 당하고 있다”는 감각이 일본에서는 강하다. “백제전”이라는 규슈국립박물관의 기획이 연기되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이것은 일본측이 백제에서 건너온 미술품을 한국에 대여하는 것을 주저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지고 있으며 교류행사에까지 악영향이 미치고 있다.

일본측에도 문제가 있다. 아베 수상이 4 월 단계에서 “무라야마 담화를 그대로 계승하는 것은 아니다” “침략의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한 것의 영향은 크며, 그 후 일본측이 아무리 정정해도 말만 따로 계속 건돌고 있다. 그리고 7 월에 열린 동아시아컵축구 한일전에서 문제있는 현수막을 내건 일이 일어나자 이번에는 일본의 문부과학대신이 그것에 대해 “한국의 민도가 의심스럽다”고 발언했다. 이것도 좋은 표현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도쿄의 헤이트 스피치라 불리는 데모를 보았더니 일본의 민도야말로 과연 어떤지라고 묻고 싶어졌다. 이처럼 한일 양국 모두 관(官)이 말과 행동에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도 갈등 요인의 하나를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의 미디어를 일본인이 자세하게 체크하게 되어서,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축구시합에서 욱일승천기가 게양된 것에 대해서 한국 미디어가 ‘전혀 그러한 사실을 일본에서는 보도되지 않았다’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마이니치신문 외 기타 신문이 분명히 기사를 썼다라는 어긋난 사실이 즉시 알려지게 되므로 그러한 점도 일본의 네티즌 사이에서 ‘한국의 신문은 한일관계를 더욱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부르고 있다.

또, 일본에서 주간 70 만 부 발행되고 있는 어느 주간지를 예로 들어 이 잡지의 기사 중 2002-2004 년의 3 년간과 2010-2013 년의 3 년간의 기사를 비교하면 전자의 한류붐이

최고조였던 무렵은 한류에 관한 기사가 16 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후자의 최근 3 년간을 보면 한국은 무법국가라는 식의 비난조 기사가 19 건으로 가장 많다. 물론 한류팬의 존재도 여전해서 한류에 관한 기사도 19 건으로 같은 수가 게재되어 있지만, 여기에도 실은 한류에 관련된 스캔들기사가 포함되어 있다. 즉, 지금 일본인의 인식에 한국은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박혀 있다. 하지만 한국의 미디어에도 문제는 있는데 한국의 신문에 나와 있는 “아베정권의 우경화” 비판보도는 너무나 일면적인 인상을 준다. 매일처럼 이러한 보도가 전개되고 있으면 박대통령 자신도 국내여론에 얽매어서 일본을 대하는 자세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우려를 갖게 된다.

따라서 정치가 혹은 정부관계자에 하고 싶은 부탁은 상대국에도 일정 정도의 이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조금 더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또, 미디어에 대해서는 한일관계 및 일한관계라고 간단하게 써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싶다. 원래 “한일관계”라는 용어 자체가 애매한 것으로, 예를 들면 발표자 자신도 일본인 동료보다 오히려 한국인 지인들과의 교류가 깊으며 이것만 보면 한일관계는 매우 양호하다는 것도 되며, 특히 해석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신중함이 요구될 것이다.

또, “폴뿌리교류가 언젠가 한일관계를 바꿀 것”이라고 안이하게 이야기하지만, 양국 간의 정치외교관계가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때까지 쌓아올려 왔던 것이 수포가 되고 만다. 현재 상태에서는 민간교류에도 정치적 관계의 영향이 미치고 있으며, 많은 대학에서 한국어를 이수하는 학생이 감소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일찌기 많은 일본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호감”을 갖게 만든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 년이 지난 후에 혐한이 되어 버린 상황은 분명히 공공외교의 실패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 일본정부는 후쿠시마의 문제를 알기 쉽게 대외적으로 알리도록 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인의 정치적인 일본에 대한 자세와 실제적인 일본에 대한 행동은 실은 상관관계가 그다지 없으며 역사인식이 어떻든지 일본요리와 일본여행에 영향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방사능 문제는 일본에 대한 행동에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다.

하지만 청소년교류는 잘 준비된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에는 매우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치를 상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공통의 과제에 몰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측 발표 “한일 청년 교류 -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이 필요하다”

한국에 있으면 아베 수상으로 대표되는 최근의 정치적인 “주류파”의 사고는 과거의 역사에 대한 재해석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 한반도의 식민지통치나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은 일본의 존립을 위해 부득이한 선택이었다거나 혹은 영광의 역사이지 비난받아서는 안된다고 역사수정주의적인 인식이 전면에 내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것이 일본사회 전체의 인식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수의 주류세력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코노담화, 무라야마담화가 발표된 1990 년대와는 분명히 다른 역사인식을 일본사회가 가지게 된 것은 아닐까라고 느낀다. 그것이 일본의 우경화인지 어떤지는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발표자 자신은 그것을 탈전후세대가 대두한 결과라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도 과거 베트남전쟁을 둘러싸고 한국은 가해자였다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데, 젊은 세대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베트남에 간 것도 아닌데 왜 윗 세대의 일로 비난받아야 되는가라고 느끼는 것이다. 그것과 일종의 비슷한 감각이며, 선악의 가치판단과는 별개의 차원에서 새로운 세대의 대두에 의해 일본사회에는 90년대와는 분명히 다른 인식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 새로운 세대는 더욱 늘어나고 그 흐름은 가속화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역사인식 자체도 세대교체되어 앞서 말한 역사인식이 대두하게 될 것이다. 또, 아베 수상이 “역대정권의 역사관을 계승한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종종 국회답변 등에서도 이것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발언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치가만이 아니라 지식인에 대해서도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다. 특히, 가장 규모가 큰 일간지 요미우리신문은 위안부문제와 관련해 코노담화를 사실상 부정하는 내용의 사실을 게재했다. 대표적인 미디어 중 하나가 이러하니 일본사회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일본의 젊은이들은 ‘조부모 세대의 일로 왜 우리가 비난받는가’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교육제도, 역사교육의 탓이라고 일괄적으로 말할 수 없는 측면이 있으며, 한국의 국사교과서 문제도 기술된 내용보다는 젊은이들이 역사과목에 흥미를 잃는 것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의 미디어는 일본의 역사교육을 종종 신문사설이나 칼럼에서 다루면서 ‘다음 세대를 짊어질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역사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애초에 한국의 어린이들에 대한 역사교육방식에 문제가 있는데 일본의 역사교육을 문제시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자세라고는 할 수 없다. 그것은 입장을 거꾸로 해도 같은 이야기일 것이다.

일본의 지식인에게 인터뷰를 하면 항상 반드시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는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한국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교육을 마치 북한처럼 받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이 점에서 일본의 보도에서 소개되는 한국의 학교 모습은 매우 일면적이며, 일본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국의 어린이 및 젊은이는 오히려 **소수다**.

한국에서는 일본에 대한 관심이 80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일본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무관심층이 늘어나고 있다. 서로의 관심이 매너화하면서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문화로서는 상대국 속에 각각 정착하면서도 상호인식이 그것에 맞추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또, 미디어가 역사문제를 빈번히 다룸에 따라 나름으로 알고는 있어도 경제, 문화 등의 영역에 있어서 상호인식은 낮아서 전반적인 관심이 저하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이 한일관계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한 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디어를 무대로 한 교류활동이라는 것이 이미 각처에서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가까운 곳에서는 조선일보와 마이니치신문이 공동주최하는 한일국제환경상 등도 그것에 해당한다. 한중일의 젊은이들을 위한 세미나도 여러 단체에 의해 자주 실시되고 있다.

2012년 8-9월에 열린 어느 교류 프로그램은 1주일 동안 합숙형식으로 대학생들이 일본 각지를 둘러보는 것이었는데, 때마침 센카쿠문제와 독도문제로 인해 한중일 관계가 긴장되어 있어서 당초에는 실시하는 것조차도 위태로웠다. 하지만 그럭저럭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다. 참가한 학생들에게 영토문제를 둘러싸고 말싸움을 하거나 하지 않았냐고

물어 봤더니 민감한 이슈는 서로 언급하지 않고 배려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무사하게 일정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역시 젊은이들의 교류라는 것은 일단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실제로 한자리에 만나면 자연스럽게 서로 배려하게 되며 그 과정을 통해 대외인식과 차이점, 그리고 과장된 정보를 상대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통감했다.

한일 양국은 역사문제나 중국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인식의 차이와 대립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그 이외의 경제교류나 문화교류를 확대해 가야 한다. 양국의 전문가들은 종종 그때까지 적용되던 패러다임을 엄두에 둔 채 양국관계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가를 논의하지만, 이제 그러한 방식이 통용될 단계는 지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오래된 패러다임에 묶인 채로라면 상황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토론

일본측 참가자:요미우리신문은 위안부를 부정하고 있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8월 16일자 요미우리신문의 사설은 ‘위안부문제에 한일관계의 목에 걸린 뼈다’라고 하면서, 아시아여성기금에서 시작한 위안부에 대한 보상기금 지급 등을 소개하고 있다. 즉,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2012년 런던올림픽 때에 남자 축구경기 3위결정전에서 이긴 한국팀 선수 중 한 명이 영토문제에 관한 플래카드를 들어서 문제가 되었다. 스포츠의 훌륭한 점은 규칙을 존중하고 전력을 다하며, 시합을 마친 후에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서로의 건투를 칭찬하는 것에 있다. 축구의 경기규칙만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의 규칙, 그와 관련된 스포츠맨십과 같은 규칙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축구는 국가대표팀의 일원임과 동시에 외국 리그에서도 활약하는 선수를 각자의 입장에서 응원하는 것과 같은 식으로 자기 속에 있는 다층의 자아를 확인하는 장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일본측 참가자:한국측으로부터 자주 일본의 중국에 대한 보도가 과장되었다는 지적이 있지만, 현재 중국에는 완전한 형태에서의 보도의 자유가 없다. 세계가 중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하는 상황에서 그 점을 파헤치는 것은 저널리스트의 사명이며, 100%의 취재를 할 수 없는 가운데 어떻게 해서 중국의 진실을 전하느냐라는 관점에서 신문 각지는 중국보도에 힘을 쓰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듣고 역시 저널리스트로서는 국익이나 자국의 벽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 어느 미디어거나 국익보다 진실에 충실해야 하며, 일본정부와 신문 각지의 관계보다도 저널리스트끼리가 거리는 가깝다. 정부는 국익을 추구하는 것이 일이며 저널리스트는 국익보다도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일이다. 중동의 알자지라가 미국에 “저널리즘”을 내걸고 진출한 것과 같은 일화를 보더라도 저널리즘의 역할은 국경을 넘고 있다는 것을 통감한다. 일본의 미디어니까 일본인만을 위해서 쓴다, 한국 미디어니까 한국인만을 위해 쓴다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인터넷시대의 부정적 측면도 자주 이야기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세계에 기사가 나감에 따라 “세계가 읽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될 것이라 생각한다. 신문업계는 곤경을

맞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중국보도에 힘을 쓰고 중국보도를 미국에 팔 정도의 기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정도의 뉴스 발신력이 없으면 미디어로서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인 것이다.

일본측 참가자: 완성된 기사의 좋고 나쁨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평론한다고 하더라도 논의가 거기에서 끝나 버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어느 쪽이나 하면 그 기사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의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이것은 천차만별이며 “팀 한국”이 있는 것도 아니며, “팀 일본”이 있는 것도 아니다. 저널리스트는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주인 이상 최종적으로는 그 점이 평가되는 것이 아닐까.

한국의 일본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자주 문제시되는 것이 야스쿠니 신사인데, 태어나서 한 번도 참배하러 간 적이 없다. 내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린다는 것은 역시 자신의 고향에 있는 절의 묘지에서, 거기에 매장되어 있는 분들을 떠올리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대다수의 일본인에게 공통되는 감각이 아닐까.

또, 최근 화제가 된 생선식료품의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외무성으로서도 당연히 과학적 견지에서 냉정하게 대응해 주었으면 한다는 메시지를 내었지만, 미국산 소고기의 BSE 문제 때의 일본의 대응을 생각해 보더라도 식품의 안전이라는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인 만큼 역시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

저널리스트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는 표현을 자주 하지만, 항상 느끼는 것은 취사선택 자체가 가치판단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아베 수상의 발언을 취급할 경우, 글자수의 제약 때문에 이것은 다루고, 이것은 다루지 않는다는 식으로 한다면 그 취사선택 자체가 이미 가치판단이라는 것을 항상 의식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측 참가자: 상대국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시기도 있고, 그 반대일 때도 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문화가 발전하는 하나의 방식이며, 그러한 업앤다운이 있는 것 자체는 반드시 큰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에 선다 하더라도, 한일 양국이 대립하는 것은 역시 역사인식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닐까라고 새삼 느끼고 있다.

일본측의 발표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에 관한 이야기를 미국에 가서까지 하고 마치 고자질하는 것 같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헤이글 국방장관이나 케리 국무장관에게 일본 관련으로 발언한 것은 미국에게 일본의 험담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측으로부터 제기된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정은 필요하며 북한에 대해서도 협력해야 하는데 왜 대립하느냐’라는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일본이 보이고 있는 역사에 대한 인식, 위안부문제에 대한 인식이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을 “고자질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용어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역사문제를 비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일본측도 조금 심각하면서도 정확하게 파악해 주었으면 한다.

일본측 참가자: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단발적인 사건이 쌓여서 움직이고 있다기 보다는 2010 년을 계기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일본과 중국의 경제력이 역전된 것, 일본의 상대적인 지위저하, 혹은 역사문제나 영토문제의 분쟁화에 동반되는 내셔널리즘의 부상,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등의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장기적 트렌드”로서 한일관계가 나빠진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일본측 참가자:일본에서 혐한을 보도하는 신문이 어떻게 지면을 만들고 있느냐 하면 한국 미디어의 일본어판을 아침부터 밤까지 읽고 그것을 뉴스 재료로 삼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 일본의 미디어가 읽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일본의 미디어가 눈을 부릅뜨고 한국의 미디어를 보는 것이 현실이 되었으며, 거기에서 “제재”가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이 있음을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위안부에 대해서는 일본의 어느 신문이든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한 적은 한 번도 없으며, 그 점이 오해되고 있는 것 같다. 국가배상을 요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강제성 문제에 관해서는 그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 견해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시대에 위안부가 된 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 점은 한국미디어도 검증해 주었으면 한다.

또, 발표에 있었던 “역사수정주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베 수상이 우익적이라든가 사고방식이 군국주의적이라고 받아들이기에 앞서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취재해 주었으면 한다. 일본에는 정보기관이라는 것이 없다. 그에 따라 일본열도가 북한 스파이의 천국이 되어, 결과적으로 납치문제의 하나의 배경이 된 측면이 있다. 그로 인해 이른바 별건체포로 밖에 혐의가 있는 인물을 조사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용의가 농후한데 법이 불충분하거나 정보기관이 없음으로 인해 북한의 공작원이 일본에 불법상륙하는 것을 단속할 수 없었던 과거의 반성에 서서 이제는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기운이 계속되어 왔으며, 그것이 “국익을 지킨다”는 의식을 고양시켜 현재의 안전보장을 둘러싼 논의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측 참가자:90 년대와 비교했을 때에 최근에는 일본의 지식인 가운데에서도 세계주의를 포기하고 시점을 좁혀 자국의 문제 쪽으로 눈높이를 맞추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일본이 과거와 달라지면서 국민도 변해 오고 있는 것 같다. 지역사회의 차원에서도 폐쇄적인 자국 중심의 시점으로 내향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여기에는 일본 경제문제의 영향도 있겠지만, 어느 면에서는 한국, 중국의 영향이 큰 것처럼 생각된다. 한국은 국가건설이나 국민건설과 같은 단계는 이미 지나 지금은 세계주의적인 경향이 나타나야 할 시기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맡아야 할 진보파가 민족주의의 문제에 부딪혀 그것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 이 상황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여겨진다. 또, 중국은 지금 바야흐로 국민국가를 건설하고 있는 단계에 있으며, 그 일련의 국가중심주의, 국민중심주의적인 움직임이 한국에 영향을 주고 그 반작용으로 일본에도 영향이 미친다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또,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 관광객에게 이야기를 듣더라도 방사능오염과 수산물에 대한 영향에 매우 민감해져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 국민의 관심이 높다는 것이 실감되었다. 그러한 국민의 인식이 수산물 수입규제의 바탕에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젊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양국의 감정적 대립을 부채질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전통 미디어보다도 SNS 나 인터넷 쪽이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때로는 본래의 글의 뜻마저 무시하는 형태로 기사를 가위질하고 왜곡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것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서로에게 발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국에서 법적인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국내를 향해 언론을 규제하는 것은 보도와 언론의 자유에 직접 관계되는 문제이지만, 외국에 대해 발신되는 악의 있는

발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도 가능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한국측 참가자: 한국의 회사에 속한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의 저널리스트가 한일관계를 취급하는 데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숙명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에 갔을 때에 10 수 명으로 구성된 논설위원실에서는 그 행동에 대해 “잘했다” 혹은 “적절한 선택이 아니다” 등 다양한 견해가 나왔었다. 그때 전체의 30-40% 정도는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독도 방문 다음날의 사실에 ‘독도 방문은 부적절했다’고는 적히지 않았었다. 논설위원실은 현시점에서 그러한 것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결론을 낸 것이다. 이것이 한일관계를 제약한 부분도 있었을 지도 모르며, 양심의 소리에 비추어 어울리는 결론이었는지 어떤지 지금도 고민스러운 부분이지만, 저널리스트 개인의 신념과 소속 조직으로서 밝혀야 할 의견, 그리고 한국의 미디어가 나타내야 할 태도가 얽혀 있는 구조를 나타내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통령의 행동이 한일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전보다는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게 되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자문을 담당했던 사람들도부터도 당시의 뒷이야기가 흘러나오게 되었다. 그러한 점에서도 이 독도방문 건은 한국 미디어와 한일 양국관계의 연관성을 생각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사례연구가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일본의 사회, 일본의 지식인이 가지고 있는 윤리의식, 그리고 일본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민도의 우수함을 평가해 왔지만, 그랬던 만큼 이번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도쿄전력의 설명책임의 미비, 은폐 사실이 명백해진 것은 한국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다. 일본사회가 이처럼 스스로 내부적인 상황을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은 것이다. 최근에 아베 수상이 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후쿠시마 원전은 완벽한 컨트롤 하에 있다’고 이야기했으나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도쿄전력의 관계자가 ‘그렇지 않다’고 반론했다는 뉴스가 화제가 되었다. 이것도 일국의 지도자가 전 세계를 향해 발신한 발언이 그 직후에 당사자인 국내의 원전기술자에 의해 정면으로부터 부정되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역사문제와는 또 별개로 “사람들이 먹는 음식물의 안전”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인 만큼 이 문제가 일본의 “진지함”과 직결되어 이해되기 쉽다는 것이 인식되도록 희망한다.

한국측 참가자:금년 여름, 일본의 예술가 쿠사마 야요이 씨의 전시회가 대구에서 개최되었다. 처음에는 지방신문에서 작게 다룬 정도였지만, 방문자수가 최종적으로는 10 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또, 전시장에는 많은 가족단위의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결과적으로는 여러 세대가 일본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도 되었으므로, 이러한 문화행사를 통해 서로의 잘못된 견해를 바르게 잡아 가는 과정도 중요한 프로세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교류의 중요성, 의의를 강조해 두고 싶다.

한국측 참가자:좋은 나쁜 일본사회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과잉하다고 할 정도로 높다. 한류든 혐한이든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이전에 어느 매체의 편집부를 인터뷰하면서 혐한 기사를 쓰는 이유를 물었더니, 편집장의 대답은 “잘 팔리니까” 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관심이 높은 이유에 관해서는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없었다. 한국사회가 일본에 대해 관심이 높은 이유는 역사적인 경위도 있으며, 이웃의 대국이라는

것으로 쉽게 납득할 수 있지만, 일본의 이러한 과도한 한국에 대한 관심의 원인에 대해 미디어 관계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본측 참가자: 저널리스트와 미디어의 관계성을 생각하면, 일본의 경우 경제성장이 순조로웠던 시대에는 양자의 관계도 매우 융화적이고 건전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게다가 인터넷 보급이라는 힘든 환경 속에서 신문이나 TV 와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와 저널리즘 사이에서는 긴장관계가 생겨나고 있다. 그것이 상업주의를 가속시키고 개개의 저널리스트의 활동에 큰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 이 점은 아마 한국도 같을 것이다. 한일 양국의 특징으로서 저널리스트나 기자는 대체로 노동유동성이 낮다. 즉, 저널리스트이기 전에 소속하는 미디어에 대한 귀속의식이 비교적 강한 경향이 있으며 거기에 여러 과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20 수년 전에 동아일보 사장을 지냈던 권오기 씨로부터 일본과 한국 미디어의 차이에 관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한국에서는 신문을 언론기관이라고 말하고 일본에서는 보도기관이라고 한다. 이 차이는 무엇이나 하면 한국의 기자는 사실보다도 말하고 싶은 것을 우선시하지만, 일본의 기자는 말하고 싶은 것보다도 사실을 우선시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기자교육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을 철저하게 가르치지만, 그 결과 논설위원이 되어도 사실을 못 쓰는 기자가 종종 등장하는 현상도 일어나므로 아마 그 중간 정도가 가장 좋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최근 한국의 일본에 대한 보도에는 과거에 지적된 특징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듯한 생각이 항상 든다.

현대사회, 대중화사회,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국민의 인식론에 대해 부연하자면, 정치나 외교와 같은 비일상적인 공간을 국민이 어떤 수단으로 인식하느냐 하면 그것은 대부분이 미디어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미디어의 정보가 국민의 인식을 형성한다. 그리고, 미디어라는 것은 자신들이 보도할 때에 긍정적 보도보다는 비판적 보도, 긍정적 표현보다는 부정적 표현을 다용한다. 원래 미디어라는 것은 숙명적으로 비판적 문화 속에 폭 젖어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최근 여론조사라는 것이 현저하게 빈도가 늘고 있다. 즉, 미디어의 상업주의, 여론조사와 정치가의 행동과 같은 순환 속에서 외교관계가 형성되는 상황이 표면화하고 있으며, 이것은 항상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여기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가 큰 과제이다.

한국측 참가자: 한국에서는 TV 나 신문과 같은 전통적 미디어의 영향력이 이전과는 다르다. 신문의 독자, 혹은 1 시간 짜리 뉴스 프로그램을 보는 시청자의 수도 점점 줄고 있으며, 모바일 단말기를 사용해 뉴스에 접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추세다. 좋아하는 항목을 터치하면 뉴스가 나오니까 자신이 보고 싶은 뉴스만을 보는 스타일이 정착하고 있다. 그러한 모바일사회에서 저널리스트는 어떠한 역할을 짊어져야 하는지는 고민이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SNS 의 보급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게 되었다. 이 점도 한국사회의 특징 중 하나다. 그에 따라 비밀로 하고 싶은 정보도 한없이 확산되어 버리고, 일단 인터넷에 올리지면 그것을 멈출 방법이 없다. 그러한 상황속에서 대형 신문사, 방송국과 같은 전통적 미디어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라고 고민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사실”을 전하는 것에 집약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의제 설정의 기능도 중요하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저변을 파헤치는

취재활동이 필요하게 되고, 한일관계와 같은 문제에서는 상대국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취재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발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하는 과정도 필요하게 된다. 이것은 단순히 한일관계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보다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어떠한 기사를 써야 하느냐라는 것으로 이어진다.

조금 전의 상대국에 발신하는 정보에 대해 규제를 마련한다는 의견에는 반대한다. 이러한 인터넷사회에서 규제를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그것보다는 한일관계가 향후의 아시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계속 표출하고 그것을 전해 가야 하며, 그러한 “공격적”인 자세야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측 참가자:한일 양국의 참가자는 저널리즘이 국민여론을 리드하고 있다는 자신감 혹은 전제 하에서 발언하고 있는 인상을 받는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특히 SNS가 발달하고 나서는 그 점에 관해 자신감을 상실하고 있다. 지금 일본의 총리대신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 반응을 항상 주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민의의 직접적 반영으로도 보이는 반면 위험을 내포한 것이기도 하다. 지금 인터넷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내셔널리즘은 진짜 내셔널리즘인 것일까. CIA 직원이었던 스노우든 씨의 사건이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그가 한 것은 결국 아나키즘이며 질서를 모두 파괴해 가는 것이 목적이었다. 또, “아랍의 봄”에서 SNS는 민주주의의 도구였던 것처럼 이야기되지만, 실제로 “아랍의 봄” 후에 그 지역에 민주주의국가가 생겼냐하면 그렇다고도 할 수 없다. 즉, 모든 것이 “파괴”되었을 뿐이다. 이것을 보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은 존재하는 것을 파괴하고 싶다는 욕구가 내셔널리즘의 이름을 빌린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진다. 특히 한국의 내셔널리즘은 강고하기 때문에 그것을 파괴하고 싶다는 욕구도 강할 것이다.

더 이야기하자면 일본에서도 일본의 내셔널리즘을 파괴하고 싶다, 한국의 내셔널리즘도 파괴하고 싶다는 현상이 내셔널리즘의 이름 아래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단적으로 말하자면 내셔널리즘의 이름을 빌린 아나키즘이 인터넷 사회에 횡행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러한 때에 우리들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 하면 “겁을 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종의 아나키즘, 무언가를 파괴하려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압력을 나날이 느끼고 있다. 저널리스트가 그것을 “검냄”에 따라 이 흐름에 가담한다는 위험성이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측 참가자:폴뿌리교류, 문화교류를 과대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양국의 상호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다. 부산에서는 “왔다갔다 아트 페스티벌”이라는 것이 열리고 있다. 양국의 예술가들이 행사 이름처럼 왔다갔다하면서 교류하며, 예술에 그치지 않고 역사문제, 혹은 민감한 현실문제에까지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며 상호이해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외교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이 행사가 해결하고 있다는 생각을 새롭게 하고 있다. 작년부터는 “조선통신사의 부활-레지던시 원류를 찾아서”라는 프로그램도 시작되어 한국의 예술가들이 조선통신사가 지나갔던 길을 걸어 보면서 주민들과 작품을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다. 역시 교류사업, 특히 청소년교류는 큰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새삼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다.

세션 3 사회자: 그러면 끝으로 양 발표자가 발언해 주었으면 한다.

한국측 발표자: 자신의 지금까지의 행동을 다시 생각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자극이 되었다. 역시 양국의 국민감정, 내셔널리즘의 충돌을 부채질하는 것이 아니라 양국의 신뢰관계를 회복시키고 이해를 깊이하는 데에 일조를 하는 것이 저널리즘의 역할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일본측 발표자: 역사인식을 둘러싼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학교 선생님에게 고자질하고 있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한 것에 관해 비판이 있었는데, 발표자의 본의는 역사인식을 가볍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아베 수상 및 박대통령의 스타일에 의문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 있다. 박대통령에 관해 이야기하자면 특히 역사인식문제가 중요하기에 조금 더 결정적인 때에 박대통령이 일본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디어는 비판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유감스러운 예로 칸 나오토 정권 시기에 조선왕조의궤를 한국에 이송했을 때의 이야기로, 한국이 일본에 문화재반환을 강하게 요구했고 이것이 실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그다지 크게 보도되지 않았고 사설로도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서는 한국인이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지나는 사태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 이와 같은 사항은 꼭 다루어 주었으면 한다. 또, 일본의 미디어에도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1996년에 “여성을 위한 아시아기금”이라는 위안부를 위한 제도가 생겼을 때에 일본 미디어가 비판적인 논조로 그것을 논한 것은 한국 미디어의 논조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

또한 ‘왜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을까’라는 의문에 답하자면 그것은 단순히 일본에 대한 한국의 관심이 높기 때문이라는 점이 전부이다. 그 결과, 좋은 싫든 관심이 빙빙 도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션 4: “총괄토론”

일본측 사회자: 이 총괄토론세션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중에서 이야기를 다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시사 및 제언을 해 주었으면 한다.

한국측 사회자: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제 1 세션에서는 동아시아 전략환경의 전망에 대해 다루었는데, 거기에서는 중국을 둘러싼 서로의 인식의 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은 중국에 대한 위기감이 강하며, 한국은 중국에 대해 일본 입장에서 본다면 낙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며, 또 일본은 과도하게 대립적인 정세인식을 고쳐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제 2 세션에서는 한일관계의 보도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구체적인 항목도 이야기가 나왔다. 수산물 수입규제, 위안부문제, 보도상에서의 단어선택, 용어 및 표현의 사용법 등 서로 반성하는 인상 깊은 세션이 되었다.

제 3 세션은 한일 간의 청소년교류, 문화교류가 테마였지만, 여기에서는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 매스컴의 환경이 변화하고, 전통적 미디어와 뉴 미디어의 관계에 혼란이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또, 청소년교류, 문화교류, 혹은 풀뿌리교류가 구조적인

한일관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논의도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상의 총괄을 토대로 삼으면서 한일관계가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미디어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해 갔으면 한다.

일본측 참가자:이틀 간의 토론을 통해 한국측 참가자로부터 군사 및 안전보장 분야에서의 상호이해라는 면에서는 비교적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았고 구원받은 기분이었다. 안보분야에 관한 정기적인 포럼도 개최할 수 있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또, 후쿠시마원전에 관한 오염수문제를 일본측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통감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아베 수상이 말한 한마디가 나라의 리더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한일관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어서 인상적이었다.

일본측 참가자:도쿄올림픽의 개최는 한국에 있어서도 좋은 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안도함과 동시에 원전사고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측에서 보면 이런 것이구나라고 배우는 점이 많다. 또, 전체를 관통하는 것으로서 한일의 “거리”가 구조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일수록 거기에 작용되는 구조로 눈을 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이번 논의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한반도 통일 후의 핵보유 방식이라는 점이, 특히 북한의 핵실험 후에 한국의 일부에서 독자적인 핵보유를 주장하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 등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걸렸다. 그리고, 한국에서 보았을 경우 예를 들면 일본의 원전사고에서의 불투명함에 대해서도, 물론 일본측의 시각으로 보자면 원자력은 평화이용이고 핵무기의 문제와는 전혀 다르다고 하더라도 평화이용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일본의 핵개발, 원자력 이용에 대해 더욱 의심이 야기되지 않을까라고 느꼈다.

한국측 참가자:회의를 통해 배운 점이 많았던 반면 기본적인 입장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다른 점이 많다는 것도 통감했다. 한국이 “파란” 나라에서 “빨간” 나라로 변화할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그 대표적인 것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우려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또, 한국의 핵보유에 대해서도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미국의 “핵우산”의 실효성 및 신뢰성에 대한 불안이지 독자적인 핵무장에 대한 욕구는 없다. 통일 후의 한국이 민주주의를 계속 지향할지 의문시된다는 일본측의 지적도 한국측에서 본다면 기우라고 단언할 수 있다.

일본측 참가자:최근 2년 정도 한미일의 원자력 전문가에 의한 트랙 1.5의 미팅에 참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의 경험을 통해 일본과 한국은 원자력 정책에 있어서 서로가 모색해야 할 공통의 문제와 공통의 해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일본은 “백엔드” 핵연료 사이클을 미국의 지지로 해 온 나라이며, 한국은 그것을 추종하기 위해 일본과 같은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3.11 동일본 대지진, 그리고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 1 원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의 일본의 핵정책은 한계에 도달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서로 상대의 경험에서 배우는 바가 있다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다음 회 이후에는 구체적인 개별 이슈에 대해, 예를 들어서 핵 문제로 이야기하자면 잠재적인 핵억제력, 잠재적인 핵의 능력과 같은 것에 대해 서로가 어떤 인식으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핵의 잠재력에 대한 각각의 민의를 소개하면 어떨까. 시민사회가 가지는 힘이 국방이나 핵을 둘러싼 정책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와 같은 테마를 논의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한국측 참가자: 최근 북한은 제 3 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북한은 위법이지만 핵을 가진 나라가 되었으며 실제로 그것을 배치하는 단계에 와 있는 듯 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 한국이 핵보유국이 된다는 것은 NPT 체제, IAEA 에 의한 감시, 또 한미원자력협정 등 다양한 조건을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선택지이다.

청소년교류에 대해서는 1998 년에 발표된 21 세기를 향한 파트너십 공동선언, 즉 김대중-오부치선언은 선언 그 자체가 역사적임과 동시에 그때 채택된 행동계획으로 인해 더욱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다. 그것이 정치적인 풍파 가운데에서도 교류가 계속되고 있는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한국에는 일본의 이공계 대학에 진학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3 학년생과 수험생들이 있으며, 한국에서 실시된 선발프로그램에 100 명 정도의 신청이 있었다고 한다. 2015 년에 새로운 공동선언을 만든다면 이러한 부분에도 주목하여 그 확대를 위해 일본이 지원을 늘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한국측 참가자: 한일관계가 대립하는 원인을 생각할 때 자주 언급되는 것은 역사문제나 영유권문제이며, 그 점을 무시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를 사상(捨象)하는 것이 된다. 하지만 그것을 전제로 하여 최근의 한일관계에서 근본적인 과제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단기적으로는 북한문제이며, 장기적으로는 역시 중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마주보는가에 봉착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에 관해서는 6 자회담이 결국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인식이 있으며, 또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요소는 역시 중국이라는 인식이 확대되었고, 그것이 박근혜 정권이 중국에 접근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본질적으로 한국이 중국을 깊게 신뢰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은 중국에 대해 한국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를 중국에 확보시켜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뼈에 사무치도록 잘 알고 있다.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그에 대한 하나의 표출이다. 또, 일본을 좋은 이웃으로 생각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중국의 부상과 중국이 한반도에 대해 패권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일본과 좋은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한국인의 희망이 있다. 그러한 구조를 참작하여 일본에서는 장기적으로 상황을 봐 주었으면 한다.

끝으로 또 하나의 한일 양국의 갈등요인으로서 한국측이 일본의 미래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개의 한국인들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군국주의와 연결해 생각해 버리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시아에서 파워를 가진 나라로서 일본은 군국주의로 현 상태를 바꾸려고 하기 보다는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균형잡기를 시도할 것이다. 그것이 10 년 계속될지 20 년 계속될지는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집단적 자위권의 논의가 나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이 더욱 부상하게 된다면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도 질서의 변경을 강요해 올지도 모른다. 거기에 일본에게 있어서의 기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조금 더 한국과 대화하고, 역사문제 등에 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한일관계는 충분히 발전하는 것이 아닐까.

한국측 참가자:미디어의 역할은 어떤 사실을 취사선택하고, 그것을 확대축소하고 분석하여 그 시비를 묻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 서면 미디어가 어떻게 의제를 설정하고 구성하느냐에 따라 자연히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게 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들으면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분리와 해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그 하나로 일본은 중국과 한국을 조금 더 분리, 해체해서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특정 미디어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과 중국이 마치 하나의 덩이리처럼 파악되는 경향이 일본에서는 널리 보인다. 중국과 한국을 동일시하고 양자가 일본을 공격하고 있다고 인식하며, 그리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을 더욱 증오한다는 식의 논리가 범람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은 질적으로 다르다. 한국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먼저 교섭해야 하며, 그것이 성사되면 한국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강조하고 싶다.

또 하나 “분리와 해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거사문제이다. 과거사문제는 영토문제나 종군위안부문제, 야스쿠니문제, 교과서문제 등 각각 조금씩 차원이 다른 이슈들의 집합체이다. 이것을 분리해체해서 다시 인식한다면 어떤 문제는 양자의 골을 매울 수 있으며, 또 다른 문제도 매우 어려운 듯이 보이지만 실은 쉽게 해결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문제를 하나하나 분리해체해서 취급한다면 한일관계는 훨씬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한국측 사회자:한일관계가 향후에 구조적으로 충돌하는 시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은 일정한 공통인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풀뿌리교류를 통해 좋은 의미에서 한일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현실이며, 그것이 또 하나의 공통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 미디어의 차이 중 하나는 한국에는 좀 더 중립적인 위치에서 전문가들이 칼럼을 쓸 수 있는 공간이 많다는 것이다. 전문가가 ‘한일관계는 이래야 한다’라고 한발 물러선 객관적인 위치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기자 이외에도 전문가들이 한일관계에 대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미디어상의 공간이 적은 것처럼 느껴진다. 각국의 미디어를 비교하더라도 서구의 국가보다도 칼럼의 위치와 그 역할이 약하게 느껴진다. 그러한 영역은 조금 더 넓혀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한국은 지금 전통적인 미디어에서 뉴미디어로 새롭게 시프트해 가는 과정에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한국적인 특징으로 SNS 를 통해 보고 싶은 것만을 보려고 하는 현상이 지적되고 있다. 한일관계가 나빠진 이유는 많이 있지만, 그 하나로 인터넷상에서 보고 싶은 정보만을 편향하는 경향이 있으며, 즉 일본이 나쁘다든가 한국이 나쁘다라는 부분밖에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조금 더 객관적인 영역을 인터넷공간, 그리고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하여 보다 중립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일본측 참가자:한일 간의 하나의 큰 인식의 차이로서는 역시 65 년체제에 대한 각각의 인식의 차이를 꼽을 수 있다. 한국측으로부터 들려오는 것은 65 년체제는 이미 붕괴했다라는 인식으로 예를 들면 징용공의 문제에 관해 한국의 사법 당국이 국내법에 근거하여 개인의 배상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낸다. 한편,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며 국제법의 견지에서는 일단 전후처리라는 형태로 매듭지은 문제를 재검토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된다. 근본적으로는 65 년체제가 걸어진 이 50 년을 어떻게 서로 평가하고 있는지, 혹은 그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으며,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로 가로놓여 있는 이상 아무리 서로의 인식의 차를 이야기해도 해결방책은 보이지 않는다.

일본측 발표자: 7 월말에 한국에서 열린 축구 동아시아대회의 한일전에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현수막이 걸려서 문제가 되었을 때에 동아일보는 “스포츠를 국수주의로 더럽히지 마라”, 한겨레신문은 “스포츠 민족주의는 이제 그만두자”, 경향신문은 “반일무죄는 이제 그만두자”라는 비판적인 신문 기사를 냈다. 이처럼 자국 안에서 일어난 일을 바로잡는 신문기사라는 것은 매우 성숙한 부분의 표출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기사를 일본의 신문이 소개하여 한국 내에서도 비판적인 견해가 있다는 것을 일본인들도 이해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다고 생각한다. 또, 일본 내에서도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우려는 높아지고 있으며, 자국의 그러한 것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하는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는 것도 그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측 참가자: 아베 수상이 블루임펄스(일본 항공자위대에 소속된 국예비행대의 애칭)를 시찰했을 때에 그 비행기에 “731”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던 것에 대해 이것은 아시아에 대한 의도적인 도발이라고 비판받은 적이 있다. 완전히 우연인 것을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오히려 일본인들은 놀랐는데, 지금은 이러한 보통이라면 생기지 않을 오해가 확산되어 버리는 환경에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금방은 불가능하더라도 통화통합이라든가 혹은 출입국관리, 전력의 융통, 안보협력 등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종류의 교류를 함에 따라 지금의 구조적인 대립요인을 줄이고 새로운 한일관계를 만들어 갈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측 참가자: 한반도 통일과 핵문제에 대한 화제가 나왔는데 통일에 있어서 최대 요인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통일한국의 핵무장을 과연 미국과 중국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는 발상에 이르게 된다. 거기까지 생각이 이르면 물론 미국과 중국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바란다는 사태는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핵무장한 통일한국이라는 우려도 자연스럽게 해소되게 된다. 핵문제만이 아니라 이처럼 보다 큰 틀 안에서 생각하게 되면 사물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분야는 의외로 많지 않을까.

한국측 참가자: 일본의 중국에 대한 인식에 위화감을 느낀 것은 일종의 이중적인 자세에 관해서다. 한국에서 보고 놀란 것은 중국에 대해 일본의 보도가 보여 주는 격렬한 비판과 공격이었는데, 그런 한편으로 중국이 압력을 가하자 센카쿠 열도에 상륙한 중국인 활동가를 기소도 하지 않고 그대로 석방하는 경우도 있어서 법치국가 일본에서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했을 정도였다. 이 점은 매우 이해하기 힘들다.

향후의 한일 저널리스트 다이얼로그에서는 일본과 중국 간의 과거사문제에 대한 견해차이에 대해 일본의 지식인들이 어떻게 보고 있고, 해결을 위해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꼭 논의하고 싶다.

한국측 참가자:현재의 한일관계는 쌍방이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는 관계라는 표현이 해당한다. 한국은 핵문제를 포함한 북한문제, 한미일의 협력문제, 경제적문제, 대외전략의 문제 등 다방면에 걸쳐 일본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정권이 내걸고 있는 동북아시아 평화협력구상을 실현하려면 일본의 협력 없이는 이를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일본도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의 존재가 필요하다. 일본이 동북아시아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또 “보통국가”로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은 필요불가결한 파트너이며, 중국문제에 있어서도 한국과의 협력은 없어서는 안된다.

양국이 서로에 대해 절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한 영역, 예를 들면 영토문제 등에 있어서는 양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쌍방이 자신의 주장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갈등이 있음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한걸음에 해결하려고 하거나, 이 문제를 가지고 양국관계 전체를 규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이해한 후에 그것을 일단은 놓아 두고 서로의 필요한 부분을 인정하고 공통점을 강화확대하여 잘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측 참가자:이번 이틀 간의 논의를 통해 한일관계에 작용하고 있었던 심리적 요인 및 경제적 요인 등이 변화한 것을 실감했다. 어쨌든 일단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돌아가서 한일관계에 있어서의 “문법”이 이전과는 확실히 바꿨다는 변화를 직시하고,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내딛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내년의 회의를 위한 과제가 될 것 같다.

일본측 참가자:나는 지도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사물을 보는 방법을 습득해 줄 것을 바라며 자료비판과제를 정기적으로 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1 년, 2 년, 3 년 경험을 쌓은 학생은 세상에 넘치는 프로파간다적인 것에 전혀 동요하지 않는 학생이 된다. 일본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해부”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자라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최근에는 그러한 학생들조차도 코웃음 칠 정도의 기사가 너무 많다고 탄식하고 있다. 꼭 일본과 한국의 미디어에 종사하는 분들은 현재의 상태를 생각하시고 학생들이 어처구니 없어 하는 기사는 쓰지 말아 주었으면 한다.

일본측 참가자:한일관계가 매우 어려워진 원인을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일본과 한국의 정치지도자가 정권출범시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책임이 크다. 또, “침략의 정의”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일본이 지금까지 한반도에 해 온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침략이 아니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이것이 기본적인 인식이라고 생각한다. 어떠한 형태이든 향후 1 년 정도 사이에 특히 위안부문제에 관해 어떠한 이해를 못한다면 한일관계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일본측 참가자:중국을 둘러싼 일본과 한국의 사고방식의 차이로서 동전의 양면구조, 즉 “지금 중국이 부상하고 있는 이면에 미국의 쇠퇴라는 문제가 있다”는 구조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 큰일에 협력이 가능할 것인데 서로가 다투고 있는 것은 우습다. 양국이 각각 자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측 참가자:이 회의에서 얻은 것을 거름으로 삼아 일본과의 보다 긍정적인 대화를 위해 노력해 가고 싶다. 제안으로 이번 회의처럼 선배 기자들의 협의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현재 양국에서 일본과 한국에 대해 다루고 있는 국제부와 외신부의 젊은 세대 기자들이 정기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양국이 만들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이해의 폭의 확대에도 공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폐회사

Yoshiji NOGAMI(일본국제문제연구소 이사장):

이번이 제 3 회가 되는 회의라서 지금까지의 결과를 계승하면서 한일관계가 어려운 시기이기는 하지만, 그 진전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준비를 진행해 왔다. 그리고 직접적인 양국관계만이 아니라 큰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둘러싼 배경을 포함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에서 쌍방으로부터 솔직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향후에도 이것을 토대로 하여 다음 회, 다음다음 회로 논의를 쌓아 가고 싶다.

유 현석(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이번 회의에서는 상대의 과오를 단순히 지적하고 공격하는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서로 자신들 쪽에 무엇이 부족했는가라는 것에서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은 신뢰관계의 축적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가능한 이상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앞으로 크게 개선되는 것이 가능하며, 그 과정에서 양국 미디어가 반드시 긍정적인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세션 5: “차세대의 주역 젊은 학생들과의 대화” (특별 세션)

일본측 사회자:회의 종료 후의 특별세션으로 일본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 그리고 이번에는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도 초대하여 젊은 세대와 대화를 나누겠다. 한일 쌍방의 발표 후에 질의 순서로 진행하고자 한다.

한국측 발표 “한일 관계의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과 그 대응방안 모색”

1965 년의 국교정상화 후 1988 년에는 서울올림픽이 개최되어 일본측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 친밀감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큰 계기가 된 것은 역시 2002 년의 월드컵 공동개최일 것이다. 이것을 계기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친밀도가 깊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2010 년이 되면 한일관계는 냉각된 관계로 흐르게 된다. 유감스럽게도 현재의 한일관계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의 민주정치는 기본적으로 포폴리즘적인 성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그 포폴리즘에 딱 맞는 “제재”가 역사이며, 이 역사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한일관계의 배경에 가로놓여 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정치가라기 보다는 교육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자국 중심의 역사교육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논의가 필요한지는 오히려 젊은 세대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은 부분인데, 예를 들면 현재의 교육과정에서는 국사(자국의 역사)를 배우고 다음에 동양사, 세계사를 배워 가지만, 그 과정을 반대로 하여 일단은 인류공동체라는 큰 틀에 서서 그 큰 틀을 의식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세계사에 대해 생각하고, 배우고, 그 위에서 동북아시아의 역사, 나아가 일본사 혹은 한국사처럼 각각의 교육을 받도록 하면 젊은 세대의 살아가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이 자연히 바뀌어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각각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지리 및 정치경제, 공민 등의 교육에 대해서는 이것과는 반대로 먼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리, 역사, 지방단위, 국가단위처럼 반대순서로 배워 가야 하지 않을까. 그에 따라 다면적으로 사물을 볼 수 있게 되고, 나아가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정서, 안정적인 정서를 방해하는 것에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게 된다. 물론 이것은 거대한 규모의 대처법으로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전형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한일 양국 간에는 논쟁의 씨앗이 많이 있다. 중군위안부문제, 독도문제를 비롯해 헤아리면 끝이 없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를 서로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확실히 사고방법은 변화하고, 사물을 보는 시야도 넓어진다. 그리고 폭넓은 사고가 최종적으로는 상대국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측 발표

학생시절을 돌이켜 보면 한국에 관련된 기억으로 지금도 매우 선명하게 남아 있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었던 때이다. 발표자는 도쿄의 대학 생활협동조합 2 층 식당에서 친구들과 있었다. 그러자 남학생 한 명이 다가와서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됐다’고 흥분해서 이야기했다. 그때의 상황은 지금도 눈에 또렷하며 그가 말한 ‘독재체제는 역시 오래가지 못하네’라는 말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당시 일본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의 일반적인 이미지는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군사독재였다.

그 후 발표자는 회사에 취직했고 85 년에 한국을 개인적으로 여행을 했다. 그 무렵은 88 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상승된 시기로 일종의 한국붐이 일어났던 무렵이다. 이 여행에서는 학생시절 알게 된 한국인 유학생의 친척집에 신세를 졌으며, 그 친절함에 감동했던 기억이 있다.

한국은 지금도 분단국가이며, 통일이라는 미완의 과제를 안고 있는 나라다. 한국의 젊은 남성들은 징병으로 군대에 가야 한다. 그 근본에는 한국이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다는 현실이 있다.

다시 한국근무를 하게 된 후 1990 년대 후반부터 2000 년대 초까지 서울에서 근무했는데, 때마침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하였고 그 임기 전반에 해당했는데 한일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 정점이 된 것은 98 년의 한일공동선언이다. 선언에서 일본은 식민지 지배에 따른 손해와 고통에 대해 사과했고, 한국측은 전후 일본의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공헌을 평가했다. 이때를 돌이켜 보면 우리 세대가 반성해야 할 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일본이 어떤 사과의 방식을 취할까라는 것에 당시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서, 이 공동선언의 또 하나의 포인트인 한국측이 전후 일본을 평가했다는 점,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일관계의 변천과 현재 상태는 냉전종결 후의 세계적 조류 가운데에서 생각해 가야 한다. 냉전종결 후의 20 수년은 글로벌화의 시대였다. 소련동구의 공산주의체제가 붕괴,

소멸하고,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으로 세계적 경제의 중요한 주인공으로 대두하여 인재, 제품, 자본, 정보가 국경을 넘어 왕래하는 시대에 돌입한 것이다. 그 조류 속에서 한국, 북한, 일본은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 단순화해서 이야기하자면 한국은 정부, 기업, 국민이 각각의 차원에서 글로벌화를 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했다. 여기에서도 또 하나의 반성점으로서 한국이 97년에 금융위기에 빠졌고 거기에서 회생하여 경제개혁을 하고 글로벌경제에 적응해 가는 과정, 그 모습을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더 한국이 글로벌화에 적응해 가는 모습을 파악해야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북한은 세계의 나라 중에서 아마 가장 완고하게 글로벌화에 등을 돌리고 이른바 세계의 외판섬이 되었다. 그러면 일본은 어땠는가. 국가도 기업도 국민도 글로벌화 속에서 자신이 서야 할 위치를 좀처럼 찾지 못하고 주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개인적인 경험과 반성점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 왔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역사문제를 생각할 때 일본의 역사, 한국의 역사에 대해 아는 것은 물론이지만, 한일 간에 역사상의 사건이 있었을 때 아시아 전체의 정세는 어땠는지, 세계사의 흐름은 어땠는지를 “시야”에 넣고 지식을 집중해 가 주었으면 한다고 바라 마지않는다.

토론

일본측 사회자:그러면 학생참가자로부터 코멘트와 질문을 받겠다.

학생참가자 1:1988-2002년에 걸쳐 올림픽과 월드컵이 있었고 개인적으로 그 시기는 한일관계가 양호했다는 기억이 있다. 그러한 시기를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와서 관계가 얼어붙어 버린 것일까. 왜 이제 와서 한일관계의 역사인식의 차이라는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는가.

한국측 발표자:여기에 이르기까지는 크고 작은 사건이 있었다. 2003년 이후 독도문제는 계속 “문제”로 존재했으며, 2000년 이후에는 일본의 역사교과서문제로 발생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은 독도문제로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독도를 방문을 한 건이었다. 이에 대해 일본에서는 간과하기 힘들다고 반발했고, 또 그것이 한국측의 반발을 부르는 결과를 낳아 최근에 이르게 되었다. 작년부터 금년에 걸쳐 일본에서는 아베 수상의 2기째 정권이 시작되었으며, 한국에서는 박근혜정권이 출범했다. 박대통령은 대화의 전제조건으로서 명확한 해명과 사죄가 없으면 일본의 수상을 만날 수 없다고 전했고, 또 아베 수상은 박대통령과 만날 필요는 느끼면서도 해명과 사죄를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양국의 매스컴을 통해 각각 다른 시점에서 보도되었고, 결과로서 국민감정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측 참가자:2011년 8월,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렸다. 1965년에 한국과 일본이 기본조약을 체결했을 때에 부수협정으로 이른바 청구권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이 협정에는 종군위안부문제와 강제징용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지 않았음에 대해 이 헌법재판소가 문제시하여 위안부와 강제징용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책임을 한국정부가 다하지 않았던 것은 헌법의 이념에 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한국외교통상부 혹은

청와대도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을 수 없었고 한국에서 일본의 종군위안부, 강제징용자에 대한 보상에 관해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일본측에서는 이미 1965 년의 청구권협정에 의해 모든 것이 결착이 났고, 서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당시 이명박정권은 이 문제를 일본정부에 대해 매우 집요하게 요구했고, 일본정부였던 민주당정권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을 거부했다. 양국의 역사문제가 이제 와서 고조된 이유로는 직접적으로는 이 2011 년 8 월에 있던 일의 영향이 컸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일본측 발표자:한 가지 정정하자면 위안부문제는 이 1965 년에 이르는 교섭 안에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징용공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 안에 포함된다는 것을 쌍방이 이해했었다.

학생참가자 2:나는 중국 출신이고 일본의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도 역사인식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보고 한일 양국 간의 역사인식문제를 보면 과연 이것이 정말로 역사인식의 차이인가라고 의문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면, 한일공동선언을 보더라도 일본측은 피해와 고통에 대해 “사과”를 했고, 한국측은 그것을 받아들여 평가하고 있다. 이 “평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화해”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일본에는 무라야마담화도 있으며, 위안부문제에 대해서도 종종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아베내각에서도 이 인식은 일관되게 계승되고 있다. 즉, 한일 간에는 기본적으로 역사인식의 일치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양국은 이 “일치”라는 측면에서 출발할 수는 없을까.

한국측 발표자:98 년의 김대중-오부치선언을 통해 의견의 일치가 있었다기보다도 “화해”에 이를 수 있다는 상태가 계속되었고, 후에 균열이 생겼다는 것이 실태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또, 독도문제를 영토문제로 파악할지 역사문제로 볼 것인지라는 식으로 “전제”부터 다른 부분도 있다.

한국측 참가자:한국에서는 정권의 이익을 위해 한일관계를 이용하고 있는 측면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일본에서도 아베 수상이 중의원선거 전에 이것을 이용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문제를 꼬이게 하는 부분도 부정할 수는 없다.

학생참가자 3:역사문제에 관해서는 역사교육보다는 오히려 미디어의 중요성 쪽이 높다고 생각한다. 2010 년에 KBS 와 NHK 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일본과 한국에서 상대국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1위가 TV, 2위가 신문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교육에 대해서는 정부의 결정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국을 우선시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제도상 필연적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또, 학습순서에 대해서도 역시 자국의 역사에서 출발하는 것이 친근함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세계사에서 출발하면 처음부터 외국의 모르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

학생참가자 4:좋은 한일관계로 가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 우리들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먼저 역사인식이라는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지고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한 개인적인 관계를 많이 맺어 감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정치적인 차원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한국측 발표자: 역사교육의 순서에 관해서는 바른 역사인식을 가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다면적으로 사물을 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또, 한국은 해방 후 1948 년에 독립했는데 당시 초대정부의 역사교육은 처음에 세계사를 가르치고 국사는 제일 마지막에 가르쳤다. 그와 같은 경험과 선례가 있으며, 또 그와 같은 역사서술의 시도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결코 무모한 시도라고는 할 수 없다.

일본측 참가자: 미디어가 해야 할 것은 첫째로는 국적으로 사물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감시하는 일이다. 이른바 미디어의 “생명선”은 권력감시인 것이다. 거기에 공통되는 것이 무엇이나 하면 “민(民)”이다. 이 점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 역사인식으로부터의 자유와 같은 내용과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민”의 눈높이에 국경은 없고, “민”의 생존권에는 항상 빛이 비추어져야 하며, 이것은 아시아를 볼 때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생참가자 5: 한국측 참가자로부터 의견을 받고 싶다. 좀처럼 일본인에게는 “잘 안 보이는” 부분이 한국이 최종적으로 한일관계를 어떻게 해결해 가고 싶은가인데 이것을 몰라서 “아무리 사과해도 끝이 없다”는 인식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큰 비전과 장래의 방향성이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학생참가자 6: 젊은 세대는 사상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일본이나 한국 모두 같으며, 예를 들면 일본에는 인터넷우익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신오쿠보에서 한국을 반대하는 데모가 일어나기도 한다. 한편, 한국에서도 축구선수가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세레모니를 한다거나 혹은 타케시마까지 수영횡단 퍼포먼스를 한 배우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이러한 경우도 있으므로 실은 오히려 젊은 세대 쪽이 윗 세대 분들보다도 강한 애국심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들 세대가 정말로 사상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매우 의문을 가지고 있다.

학생참가자 7: 일본이 되풀이해서 사죄하는 한편으로 사죄와는 상반되는 듯한 발언이 나와서 사죄를 무효로 해 버린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나라의 사죄와 개인의 발언의 차이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어느 정치가가 야스쿠니 신사에 가고 역사문제에 관해 일본은 사죄할 필요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발언했다는 것만으로 일본이 국가로서 사죄한 것이 무효가 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진다.

무라야마담화와 코노담화에 관해 한국의 친구들에게 물어 보면, 모두 ‘그런 것은 모른다’는 반응이었다. 과거의 신문을 조사해 봤더니 무라야마담화의 전문이 게재된 신문은 한겨레신문 하나밖에 없었다. 무라야마담화와 코노담화는 양국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의 미디어는 그것을 충분히 다루고 있지 않다. 게다가, 그러면서도 이 무라야마담화와 코노담화에 대해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기사만은 게재하고 있다.

한국의 미디어는 정말로 양국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균형잡힌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안게 되었다.

한국측 발표자: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한일관계의 존재방식은 “평범한 이웃나라 관계”라는 것이다. 자유롭게 사람들이 왕래하고, 그리고 상대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지나친 관심은 가지지 않는다. 또, 상대국측에서 무언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가서 도와주고, 이쪽이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도움을 받는다. 그러한 평범한 이웃나라 관계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또,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해결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가서는” 과정이 반복됨에 따라 “최종적인 해결”도 보이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또, 젊은 세대 쪽이 애국심이 강하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일반론으로 유연함은 젊음의 특징이며 젊은이들 속에 “타는 듯한” 애국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 타는” 것은 아마 지금뿐이라고 생각한다. 애국심이 강한지 약한지는 결국 자기인식에 따르지만, 젊은 세대가 애국심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 경험으로 보더라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애국심은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직업군인이라면 애국심이 요구되겠지만, 일반국민에게 있어서 과연 애국심은 필요불가결한 것일까. 과거 애국심에 불타던 세대는 결국은 자신들을 불행으로 이끌었다.

무라야마담화를 당시의 한국 신문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전문을 보도한 것은 한겨레신문만이였을지 모르지만,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더라도 나는 개인적으로 매우 높게 평가했었고 기사도 썼다. 당시의 보도를 상세하게 보면 아마 평가는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국민의 의식을 제대로 환기하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좋은 것은 좀처럼 보도하지 않고, 나쁜 것에만 눈이 가는 기자의 “습성”의 결과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한일 저널리스트 다이얼로그의 논의에서도 실로 이 점이 초점의 하나였다.

국가와 개인의 입장은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는 찬성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야기하자면 “일본은 반성하라”와 같은 표현도 단순화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비판을 하더라도 조금 정확하게 지적할 필요는 확실히 있을 것이다.

학생참가자 8:한일 양국의 상호이해를 심화하는 방책으로 한일 양국의 주요신문사가 합동으로 한일 각 신문사의 사설을 게재하는 웹사이트를 설립하면 어떨까. 같은 뉴스라도 일본과 한국에서는 받아들이는 법이 크게 다르며, 보도의 방법도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날그날의 양국의 신문사의 신문사설을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한일 양국의 상호이해를 깊이할 수 있는 것으로 이어지고,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는 자세를 촉진하는 작용도 있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이나 하면 상대를 상처 입히는 도구로 사용되기 십상이지만, 바르게 사용하면 양국의 상호이해를 깊이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도 될 수 있다.

한일관계나 역사문제를 생각할 때에 자주 듣는 말이 “젊은이들의 세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말 그대로 우리들은 인생의 선배인 어른들의 여러 가지 의견과 어드바이스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자기변혁을 도모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어른들의 도움도 필요해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한일문제를 생각해 감에 있어서는 젊은 세대와

어른들의 세대가 상호작용하면서 상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학생참가자 9:나는 미국에서 자랐고 초중학교 교육을 미국에서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역사공부는 콜롬부스의 1492 년부터 시작된다. 그러한 개인적인 배경도 있어서 타케시마문제 등은 주변수역에 있어서 경제권익과 같은 중요한 경제문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역사인식의 문제에 관해서도 양국 정부나 미디어가 전하고 있는 것은 정말일까라고 의문을 느끼고 있고, 오히려 제 3 국의 미디어나 정부가 전하고 있는 것이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역사교육이 사물을 보는 방법을 바꾼다는 것은 확실히 그렇다고 실감한다. 또, 뉴스를 보고 있으면 미디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압력을 느낄 정도이다. 미디어의 전달방식에 따라서는 문제를 부채질하거나 악화시키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통감한다. 그러한 가운데서 미디어의 역할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보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묻고 싶다.

학생참가자 10:미디어는 그 성격상 과격한 부분이나 비판적인 부분을 강조하여 보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있으면 “이 나라 무섭네”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역시 그 나라에 가서 직접 사람들과 접해 보면 그 나라에 대한 생각도 바뀐다고 생각하며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그 점은 확신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앞으로 교류하여 관계를 깊여 가야 한다고 다시 느끼고 있다.

학생참가자 11:국제관계에 있어서 미디어의 역할에 관해, 조금 전에 기자로서의 언론의 기본적인 특성 때문이기는 하지만 편향적인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조금 더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한국측 참가자:모두 중요한 문제제기였는데 그중에서도 “최종적인 해결”이라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한국이 제기하고 있는 역사문제는 주로 영토, 전후의 보상문제, 종군위안부 이 세 가지다. 이 중에서 종군위안부에 대해서는 노다 내각의 사직으로 최종합의에는 달하지 못했지만 수면 아래에서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 미디어의 보도로 밝혀졌다. 즉, 양국 정부 모두 결코 대책없이 서로 노려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언젠가는 외교적인 해결, 착지점에 이를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독도문제에 관해서는 한국으로서는 일본이 독도에 대해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타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여도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한국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라고 생각한다면 쌍방이 모두 전쟁으로 “결착을 짓는” 것과 같은 사태를 처음부터 바라지 않는 이상, 혹은 현상유지와 같은 형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측 참가자:지금 여기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의 시작이다. 어제부터 이틀 간 지금까지의 미디어의 존재방식의 문제점을 포함해 서로의 입장에서 재검토하고 의욕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매체나 개인에 관해서도 널리 소개되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전하고 국적이나 소속된 회사가 아닌 개인의 시선으로 논하는 그것이 이상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으면서도 좀처럼 거기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그러한 저 멀리 있는 목표도 결국은 다시 한 번 상대에 대해 생각하고, 자성하고, 다시 생각하는 작은 과정의 축적을 통한 변화에 의해서 밖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디어에 대해서는 요구되는 것이 매우 많고 현직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자문하고 있다. 힘을 다해 대처하고 있는 데도 왜 항상 결과는 이렇게 되어 버릴까라고 유감스러울 때도 종종 있다. 그와 같은 기분에 사로잡히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미디어의 자기노력의 한 측면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있는 저널리스트 전원이 일치된 기분으로 최선을 다하고, 다시 잘 생각하며, 보도에 임할 때에는 신중하려고 노력해 갈 것이라고 다시 말하고 싶다.

발표 자료

세션 1: “동아시아 전략환경의 전망”

동아시아 전략 환경의 전망

1. 전반적인 정세: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는 불확실성, 불투명성이 고조되고 있다
 - (1) 민주주의, 자유, 인권, 법의 지배: 우여곡절은 있지만 시대의 추세이다. 이런 움직임에 저항하는 움직임도 있으나, 아시아의 국제관계의 바탕을 이룬다.
 - (2) ‘국가의 시대’: 영토, 주권의 주장, 국력의 증대를 지상명제로 하는 정부. 이를 떠받치는 편협한 내셔널리즘의 존재. 국가간의 대항, 경쟁관계가 격화되고 있다. 미디어가 이런 내셔널리즘을 선동하는 나라가 상당수 있다.
 - (3) 권력 정치의 심각화: ‘부국강병’ 정책 채용, 액션=리액션형의 군비확장 경쟁.
2. 두 대국의 불안전성과 불확실성
 - (A) 중국을 둘러싼 문제
 - (1) 전형적인 근대화 과정에 있는 국가다. ‘부국강병’ 정책을 추진. 영토와 주권을 둘러싼 문제.

‘평화 발전론’은 과거의 것인가? 최근 수년 동안의 중국의 행동에서 지역 국가들은 ‘중국의 참 모습을 알게 되었다.’
 - (2) 자신감과 불안: ‘대국’으로서의 자신감과 심각한 취약성에 대한 불안.
수십 년에 걸쳐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한 나라에서 국민이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심각한 불안을 느끼는 사례는 없다. 국내의 정치, 사회의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 (3) 해양국가로 변모하는 과정: 그러나 (a) 해양에도, 영토와 동일한 배타성을 추구하는 것, (b) 해양의 국제적인 룰 준수에 소극적인 것은 커다란 과제다. 해양 문제는 국제적인 룰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 (4) 중국의 대외활동은 점점 더 불안정하고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다.

(국내외에 존재하는 심각한 취약성, 경제 동향의 불투명성, 국내의 권력 정치, 사회 불안, 권력의 정통성의 취약함 등)

(B) 미국을 둘러싼 문제

- (1) 아시아태평양의 ‘안정 요인’: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계속해서 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동맹의 역할은 앞으로 강해지기는 해도 약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동맹국뿐만 아니라 동남아국가에서도 이런 인식을 공유한다. 안정적인 동맹관계는 중국이 국제적으로 책임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도 큰 공헌을 할 것이다.
- (2) ‘태평양국가’로서 계속해서 아시아의 국제관계에 관여하겠다는 자세를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의 ‘Pivot/Rebalancing’정책) 이 정책은 군사뿐 아니라 경제 등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아시아 관여정책이다.
- (3) 국내 정치의 제약: 예산 삭감의 영향, 국내 정치의 분열과 대립의 심각화. 일관성 있는 아시아 정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아시아 국가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 (4) 동맹국에 대해 책임 분담 움직임: 동맹국들의 대응은 상이하다.

(C) 미중관계의 불안정성

- (1) 군사, 경제, 가치를 둘러싼 대립:

군사적으로 가열될 리스크가 큰 군사 전략 채용, 아시아의 지역적인 경제협정을 둘러싼 정책의 차이,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법의 지배를 둘러싼 상이한 자세.

- (2) 심각한 상호 불신, 상호 경계심: 자국의 장래에 대한 불안 증대, 자국의 불안을 야기시키는 원인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
- (3) 미중 ‘신형대국관계’는 가능할까?
- (4) 미중관계의 동향은 북한의 움직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북한은 미중의 ‘제휴’를 우려. 미중 모두 상대에 대한 경계심과 불신. 북한에게 흥정(bargaining)의 여지.

3.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한일 양국의 과제

- (1) 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한일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할 것이다.

- (2) 한일 양국은 아시아의 국제관계 저변에 민주주의, 인권, 법 지배를 강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일협력은 이런 커다란 흐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3) 오늘날의 한일관계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으나, 전후(戰後) 한일관계에는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면서도 양국 국민의 평화와 번영에 커다란 공헌을 한 수많은 협력과 공동 행동이 있었다. 이것들은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많은 기여를 했다. 한일 양측은 당장의 문제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한일협력의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에도 냉정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는 과거의 위대한 유산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한다. 넓은 시야에 입각해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21 세기 동아시아의 전략환경과 일본의 길

1. 일본에 대한 미국지식인들의 단상

<1> 하워드 진 전 보스턴대 교수 (2005.10 보스턴 인터뷰)

미국의 대표적 진보사학자였던 하워드 진(1922~2010) 보스턴대 명예교수는 한번도 방한한 적이 없지만 생전에 한국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보였던 인물이다. 2005년 가을 보스턴에서 만났을 때 그는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적 민주주의 국가로 여겼던 일본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된 배경에 대해 이렇게 털어놓았다.

"1966년 특별강연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재일조선인들이 미국의 흑인들처럼 차별 받는 현실을 보고 놀랐다. 일본을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생각해왔는데, 재일한국인들이 미국의 흑인처럼 차별을 받는 것을 본 뒤 일본에 대해 생각을 바꿨다."

<2>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 (2012.10 뉴욕인터뷰)

"요즘 일본의 행태에 대해 아주 우려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것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문제 삼아 일본이 독도 영유권 논란을 벌이고 종군 위안부의 존재까지 부인하는 것은 더 심각하다. 현재 일본의 리더십은 신뢰하기 어려운 상태다. 모든 나라엔 극단주의자들이 있다. 미국에도 티파티가 있듯이 일본도 그렇다. 오바마 2기 때 미국이 한·일 양측관계에서 일정한 중재자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미 학계에서 진 교수나 그레그 전 대사와 같은 시각을 가진 인사는 소수다. 일본정부와 재계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주류학자와 싱크탱크 인사들은 대부분 일본에 호의적이다. 미 정부인사들도 미일동맹을 기본으로 동북아관계를 설명해왔던 게 그간의 역사다. 그러나 좀 더 역사를 깊이보고, 미래를 생각하는 이들은 일본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2. 2013년 아베시대의 일그러진 일본 자화상, 개인 문제인가 집단 문제인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시대 들어 아베 총리를 앞세운 우익의 기수들이 2차대전기 일본의 침략사실을 부인하고 위안부 존재마저 부정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도쿄(東京) 전범재판의 정당성 부정이다. 아베 총리는 태평양전쟁 책임자들을 처벌한 극동국제군사재판에 대해 "승자의 판단에 따른 단죄"(3월12일)로 규정했다. 이 경우 아베 총리의 발언은 승전국 미국이 주도한 전후체제에 대한 정면도전이 된다. 아베 총리는 이어 "침략의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정해지지 않았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4월 23일)고 말해 국내외적 논란이 일었다. 또한 "(식민지배와 침략을 사과하는 내용이 포함된) 무라야마 담화를 그대로 계승하지 않겠다." (4월 22일)고까지 말해 은퇴한 노 정치인 무라야마

전 총리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5월 12일 동일본대지진 피해지역인 미야기(宮城)현 히가시마쓰시마(東松島)시의 항공자위대 기지를 방문해 곡예비행단 '블루 임펄스'를 시찰하면서 '731'이라는 편명이 적힌 훈련기의 조종석에 앉아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린 포즈로 사진을 촬영했다. 이에 대해 미국 외교가에서는 2차 세계대전 최대의 비극으로 꼽히는 731부대를 연상시키는 사진을 찍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며 "믿을 수 없는 행보"라고 비판하고 있다.

워싱턴의 정치·외교 정보지인 벨스 리포트 (5월14일) 는 워싱턴 외교가의 논란을 전하면서 "(731이라는 숫자가 전면에 부각된) 아베의 이 사진은 독일 총리가 '재미로' 나치 친위대 유니폼을 입고 나타나는 것과 동급" 이라며 "독일에서는 (나치 유니폼 착용 등) 불법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도덕적 반감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썼다.

이에 대해 제니퍼 린드(행정학) 다투머스대 교수는 "(아베 총리가) 731부대를 끌어내는 것은 우연이 아니며, (이번 사진은)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의 눈을 불타는 꼬챙이로 찔러버리는 것으로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에 어떤 이익이 있을지를 생각하게 한다."며 "지독하게 도발적"이라고 비판했다.

아베총리의 정치적 파트너인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8월 29일 도쿄에서 열린 한 강연회에서 개헌 논의와 관련해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이라고 평가 받는 바이마르 헌법도 어느새 나치 헌법으로 변해있었다"며 "그 수법을 배우면 어떨까"하고 말했다. 이 발언이 국제적 파문을 일으키자 3일후 "나의 나치 정권 관련 발언이 오해를 불러일으켜 유감이며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아베 진영의 좌충우돌식 발언으로 한일관계는 물론 일본의 대외관계가 긴장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요즘과 같은 글로벌 시대에 나치, 731부대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비역사적인 것을 너머 몰역사적이고, 비문명적인 행위라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핵심 지도층은 이렇게 몰역사적 비문명적 발언 파동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개인의 자질문제가 아니라 집단의식의 반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아베진영 인사들의 도발적 역사관, 일본의 2차 대전 패전 피로증후군 때문일까

아베진영의 역사도발은 이미 조지 프리드먼과 같은 미국의 안보전략가들이 예견했던 문제다. 프리드먼은 저서 '100년 후'(Next 100 years)에서 "2차 대전 패전의 경험으로 무력충돌에 대한 일본의 욕망은 약하지만 현재의 평화주의가 영원한 원칙은 아니다"면서 "2020년대에도 일본이 침묵 속에 평화주의를 지속할 거라고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일본우익의 패전사 뒤집기는 필연이고, 이로 인해 2020~2030년경 미일동맹이 균열될 것이라는 게 그의 관측인데 아베 총리의 출현으로 인해 그 시기가 7~8년 정도 빨라졌을 뿐이다.

흥미로운 것은 미 전략가들이 이 같은 미일동맹 균열기를 예상하며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프리드먼은 "동북아에서 한국은 일본의 힘을 견제하기 위한 평행주"라고 규정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핵심축(린치핀)으로 규정하면서 일본에 대해선 주춧돌(코너스톤)로 표현한 것은 바로 이 같은 전략적 배경이 깔린 외교화법일 수 있다. 조지 W. 부시 시대까지 일본은 미국에게 늘 '현금자동인출기' 대상 국가로 여겨졌다. 미국은 미일동맹을 최고로 애기하면서 이라크전쟁이나 리비아 전후 복구 등 국제기금이 필요할 때엔 늘 일본의 두둑한 기여를 사실상 압박해온 것이다. 중앙일보는 8월 5일자 사설에서 일본 아베 정부의 역사 퇴행현상을 '일본의 자폐증'이라고 규정했고 이것은 바로 '아시아 평화의 걸림돌이다'라고 썼다.

4. 시진핑 시대 동북아, 게임물이 달라진다, 일본, 과거에 집착할 시간이 없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기 행정부 들어 아시아 중시 외교를 본격화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부터 '아시아 재균형', '피벗 투 아시아(Pivot to Asia,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등의 용어를 쓰며 아시아 중시론을 피력해왔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아태지역의 핵심 이슈는 무엇보다도 미일동맹과 한·미 동맹을 통한 대중 견제이고, 북한핵문제 해결이다.

그러나 경제적 규모면에서 세계 주요 2개국(G2)지위에 올라선 중국은 경제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아시아에서 근육질을 과시하려는 의지를 구체화하고 있다. 따라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시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협력과 발전은 중국과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데 일본의 최근 행보는 여기에도 상당히 역행한다.

시진핑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통해 신형 대국관계론을 공식화했다. 미국과는 당분간 충돌하지 않고 협력해나가겠다는 게 중국지도부의 의지다.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도 한미동맹 및 남북관계를 고려해 충돌지향적인 정책 대신 협력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 그렇다면 동북아에서 중국의 충돌요인은 일본이다. 실제 센카쿠(다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갈등은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

5. 일본, 21세기 전략 목표에 맞춰 지혜롭게 행동하라

일본이 한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미일동맹도 흔들리고, 동북아의 연대틀도 흔들리고 글로벌 지위도 흔들릴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일본의 전략적 국익을 위해 3가지 주문하고 싶다.

(1) 독도, 일본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따져봐라

로버트 매닝 미국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제임스 콘래드 미국해군분석센터

선임고문과 함께 지난 6월4일 한일관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호의표시로 독도 포기 선언하라고 파이낸셜 타임스에 썼다. 그 후 9월 매닝 연구원이 방한했을 때 만나 얘기를 해보니, 일본 식자층에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 실망했다고 말했다.

일본 지식인들에게 독도가 얼마나 일본의 미래 외교안보에 긴요한 문제냐고 묻고 싶다. 지난 8월 홋카이도여행 때 야마구치 지로(山口二郎) 홋카이도 대 법학부 교수를 만난 적 있다. 민주당 정권 때 외교안보 핵심 자문역할을 했던 야마구치 교수에게 '일본이 벌이고 있는 3대 영토분쟁을 중요도 순으로 꼽으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질문했을때 야마구치 교수는 주저 없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최우선이라고 했다. 중국의 경제력 확대와 맞물리면서 점점 더 의미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중국이 지속적으로 센카쿠 문제를 논란으로 만들려는 것은 제국주의적 강국이 되려는 야심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센카쿠 문제가 일본에도 아주 핵심적인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로는 북방4도를 꼽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북방4도가 아주 큰 섬인데다가 어업이권에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렇지만 4개도를 모두 돌려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관심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포기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북방4도 이슈라고 말했다. 반면 그에게 독도 문제는 3대 영토 이슈 중 가장 우선순위가 낮은 이슈였다. 한일관계를 늘 위기로 몰고 가는 휘발성 높은 이슈인 독도문제에 대해 그는 "상징적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일본이 주변국들과 영토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독도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게 다른 문제 풀이를 위해 좋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부연설명을 했다. 독도 문제가 센카쿠나 북방 4도보다 해결되기 쉬운 문제라는 뉘앙스였다. 어차피 독도는 일본인들에게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일 미래관계의 장애물이 된다면 포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봤다.

(2) 위안부 문제, 반성하고 반성하고 반성하라.

전쟁기 여성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제기는 글로벌시대 보편적 상식이 됐다. 미국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이래 위안부 문제가 여성인권의 문제로 전쟁기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로 인식. 더 이상 한일관계 문제가 아니다. 이것에 대해 확실히 하지 않으면 미일관계 장기적으로 어긋나게 된다.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미국대통령이 될 경우 일본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다.

(3) 과거사 청산 철저히 하라.

독일 수준으로 하지 못하면 일본이 아무리 전 세계 각국에 ODA를 뿌려도 문명국가로서 존경 받지 못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입성은 불가하다. 프랑스의 경우 독일의 안보리 입성 지지하고 있는데 한국, 나아가 중국은 일본 안보리 입성 연감생심이라고 부정한다. 이웃의 핵심 국가의 지지 받지 못하면 공염불이다. 더구나 일본우익들은 731문제를 자랑 삼아

얘기하는데 2011년 중국 헤이룽장성(黑龍江省) 하얼빈에 있던 731부대 현장을 가보니 중국인들은 현장을 그대로 보존해놓았다. 학교로 쓰였던 731인체실험 공장에 들어서면 여전히 피 냄새가 나고 한국과 중국인들의 피에 사무친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한데 그것을 일본이 여전히 자랑스레 얘기하려 한다면 문명국가로 존경 받을 수 없다.

6. 맺음말

최근 한국의 외교전문가와 "만약 일본이 독일처럼 일찌감치 과거사를 반성하며 대외협력주의로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를 주제로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아마 일본은 벌써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를 가졌을 것이고 한국외교의 설자리는 영영 사라졌을 것이라는 게 그날 대화의 결론이었다. 그래서 아베 진영의 역사도발은 허망한 과거사 회귀시도이고 역으로 한국에게는 큰 기회라는 얘기를 나눴다. 일본이 망상적 집단 나르시즘에 빠져 헤매는 시간을 한국이 잘 활용하면 21세기 한국외교의 길이 새롭게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한국에선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만 잘 나갈 수는 없는 구조다. 한국의 지식인들, 저널리스트들은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경제를 견지하는 일본과 함께 나가길 희망한다. 그래야 한미일 동맹도 상호 강화되고,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동북아 평화도 열린다. 일본이 하루빨리 이 같은 전략적 판단을 하길 기대한다.

세션 2: “한일관계의 미래상 모색”

한일 관계의 미래상의 모색

1. 새로운 국제 분업(分業)의 진전

배경 / 한국의 공업화와 민주화(1970-80s), 일본 경제의 거품 붕괴(1990-)

산업구조의 공유 / 중화학 공업, 자동차, 원자력, IT 산업

→환경 기술, 신재생 에너지, 우주 산업으로 확대됨

새로운 국제 분업/일본에서 부품과 중간재를 수입해서 한국이 조립해서 수출

산업 내의 고도의 국제 분업 (생산 공정, 태스크 단위)

-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의 소재, 부품 공장의 한국 진출 / 스마트폰
- نيسان자동차 / 르노 삼성에 생산위탁, 한국에서 부품 조달

광역 경제통합 / 다자간 FTA 들를 통한 무역 및 투자의 고도의 자유화, 규칙 만들기

→경제적으로 한일 양국은 진정한 ‘국경 없는 시대’를 맞이함

2. 새로운 외교 이니셔티브?

제 1 이니셔티브 / 박정희 & 이케다, 사토

‘안보 우선·경제 개발’형 외교

제 2 이니셔티브 / 김영삼, 김대중 & 미야자와, 호소카와, 오부치

‘과거 반성·미래 지향’형 외교

제 3 이니셔티브 / 박근혜 & 아베신조

‘미중 가교·경제 통합’형 외교

*공통의 국제 정치적인 입장, 공통의 경제적 이익,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

*중국의 대국화 / 안전보장에서는 미국 의존, 경제 분야에서는 중국 의존

*공통 전략 가능성 / 한일이 공동 이니셔티브를 발휘한다면...

3. 역사 마찰의 구조화

현황 / ‘전후(戰後) 최악’은 아니지만, ‘가장 큰 전환점’의 하나!

‘신뢰 외교’(“trustpolitik”) vs. ‘침략의 정의’ / 정치 지도자의 ‘불행한 만남’

- 역사 논쟁 / 인식의 게임, 명분론의 세계, 고집 부리기 경쟁
- 지도자 차원 / 회담 거부 vs. 유화 거부→‘주장하는 외교’, 논쟁의 국제화

사법 개입 → 65년 체제에 이의 / 당시 외교 결착(청구권 협정 등)을 번복

① 한국측 주장은 상식의 테두리를 넘어섰다 / 이대통령의 독도 방문...

② 여기서 양보해도 같은 일이 되풀이된다 → 유화 거부

*법률(합의) 문화의 대립 / 무사 문화 vs. 유학자 문화
'2015 년 문제'의 존재

4. '2015년 문제'에 대한 대응

'2015 년 문제'란? / 2015 년은 '역사의 해'→명분 논쟁 격화

- 논쟁을 수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예감/첫 단계에서 교착
- 한일조약 50 주년(2015.6)을 계기로 한국 내에서 조약 반대 • 개정 운동?
- 일본에서는 8 월에 전후 70 주년 '아베담화', 9 월에 자민당 총재 선거

4 개의 시나리오

- ① 2014년까지 한일 '역사 화해' / 50주년을 새로운 시대의 발판으로
- ② '정경 분리'로 적당한 거리를 둔다 / '화해'를 뒤로 미룬다
- ③ 제3자의 '중재'에 의한 현안 처리 / 양측 모두 받은 만족, 받은 불만
- ④ 모두 실패 / '정치도 냉각되고 경제도 냉각', 반일과 혐한이 고조된다 →감정의 충돌

당장의 처방

- 논쟁의 국제화, 특히 '중국 이용'은 적절하지 않다 / '괴롭힘'으로 받아 들인다
'한중 결탁'론 → '새로운 사대주의'론 / 한일 대립의 숙명론
'중일 선행'론 / 중일간의 대립이 해결되면 한일대립이 해소된다 / 대국주의
- '정부나 사법이 파괴한 것은 민간이 재건한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위로부터의 파괴 vs. 아래로부터의 재건 / 사회안정망
경제 교류를 바탕으로 문화, 지방, 학생 교류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
- 매스미디어의 역할의 중요성
상업주의의 회피 / 내셔널리즘의 확산을 예방 → 좋은 '조언자'

한일관계의 현재와 미래

1. 한일관계의 현재상

A. 교착된 한일관계

한일관계가 교착되고 이례적이라는 점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다. 지금까지의 한일관계에 비추어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일관계의 현재는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다.

- (1) 양국 정상의 취임 이후 현재까지 공식적인 정상회담을 가지지 않았다.
- (2) 외교 당국간의 대화의 방식도 해결책보다는 상대방의 흠집잡기에 초점이 놓여 있다.
- (3) 역사 및 영토문제로 국민감정이 상해 있다.
- (4) 서로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약해져 있다.

B. 누구도 돌보지 않는 한일관계

양국 관계가 손상되고 교착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타개하고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

- (1) 양국 모두 정상들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원칙론만 존재할 뿐 상대방이 먼저 손을 내밀기만 기다리고 있다. 전략적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겠다는 자세다.
- (2) 양국의 정치적 대화의 채널이 될 수 있는 한일의원연맹은 기능부전상태에 빠졌다. 양국에 대한 이해가 일천하고 정치인들의 세대교체가 겹쳐 책임감 있고 정치적 비중이 있는 인사가 없다.
- (3) 외교 당국간에도 불신과 오해의 골이 깊다. 한일관계 개선을 희망하고는 있지만 대화의 창구와 개선의 방법론에 대해 혼미한 상태다.

C. 네 가지 겹으로 뒤틀린 한일관계

이 같은 교착된 한일관계의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겹이 존재한다.

(1) 인지의 겹 (cognition gap)

한일관계가 나빠진 시점에 대한 한일 양국의 인지가 다르다. 한국은 2011년 12월 교토 정상회담부터라고 본다. 종군위안부문제가 핵심이다. 일본은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천황관련 및 국제적 영향력 저하 발언이 시발점이라

고 본다. 일본 비하와 경시가 핵심으로 본다.

(2) 적응의 갭 (adaptation gap)

양국 모두 변화된 상대의 모습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사과요구에 지치고 반성요구에 대해 불만을 가지면서 한국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는 일본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국제적 지위의 격상과 역동적인 변화로 인한 자신감있고 원칙을 고수하는 한국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3) 전략적 인식의 갭 (strategic perception gap)

중국을 보는 눈이 다르다. 일본은 센카쿠 분쟁 이후 대중 포위망 구축을 통해 중국에 대한 외교적 우위를 확보하려고 하면서 중국에 대한 경계심과 위협인식이 아주 강하다. 하지만, 한국은 북한문제의 관리, 비핵화, 향후 통일 달성을 위해 중국의 협력이 불가결하다고 보고 있다.

(4) 아이덴티티의 갭 (identity gap)

일본은 주변국에 대한 사죄와 반성, 보상이 자학사관에 기초한 것이라며 일본의 자긍심 회복을 위해 역사 인식을 수정하려 한다. 자궁사관을 고취하고자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과거사의 부정, 왜곡, 미화가 포함되어 있다. 한국은 국제국가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해 국가에 자긍심을 가지면서 국제적 상식과 원칙을 지키려고 한다.

2. 한일 갈등을 확대재생산하는 양국 언론의 보도

양국 언론이 한일 갈등을 만드는 실체적 주체는 아니다. 하지만, 양국의 보도 경향은 분명히 한일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A. 종합적인 분석 보도보다는 단편적이고 선택적 사실 보도가 주류이다.

한일관계에 대한 보도는 긴 과정중의 하나인 단편적 소개가 많고, 상대방의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선택적 보도가 많다. 예전에도 그랬으나 이러한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B. 한일관계의 좋은 단면은 접어두고 나쁜 점만 드러내고 있다.

한일 양국의 투자, 인적 교류 증대, 화합적 행사 등에 대한 보도는 적고, 상대방의 약점과 드러내기 싫은 부분에 대한 취재가 선행하고 있다. 양국 모두 자기반성적인 고찰이나 분석은 거의 없다.

C. 양국 정부의 입장을 변호하고 확장하는 보도가 많다.

기자클럽제도의 영향인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역지사지의 정신보다는 자국 정부의 외교방침을 뒷받침해주고 변호하는 보도가 많다.

D. 독자나 시청자들의 선호를 선제적으로 형성해가는 경향이 있다.

독자들의 선호를 미리 판단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만들어가는 매체가 늘고 있다. 언론 및 보도기관이 인터넷 매체화 하고 있다.

3.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제언

한일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양국의 노력이 없이는 오해와 불신이 늘어나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A. 한일관계에 대한 자기 인식의 제고

- (1) 양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함께 수호해야 하며, 중국과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전략을 공동으로 구상해야 할 파트너이다. 다만, 중국과 북한에 대한 봉쇄 및 억제전략만으로는 적극적 평화를 달성할 수 없다.
- (2) 한일 양국은 동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가진 국가군이며, 발전도상국, 개도국들에게 공동의 경험을 전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 (3) 전전 세대와 비교하면 자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면서도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교류를 심화할 수 있는 경제적, 기술적, 문화적 토대를 공유하고 있다.
⇒ 협력을 안 하면 lose-lose이고, 협력을 하면 win-win 조합을 만들 수 있다.

B. 양국간 대화 및 교류 채널의 복원 및 강화

- (1) 양국 정상 간의 대화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게 좋다. 이는 당장 제반 현안을 일소하기 위한 대타협의 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양국 관계 호전을 바라는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 (2) 양국 외교 당국 간 정례적인 대화 및 협상의 창구가 활성화되는 동시에, 정치적 대화 채널의 복원이 시급하다. 양국 정상이 만나지 않더라도 서로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한다.

- (3) 한일 양국의 비정치적 협력 안건들은 정치외교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며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 경제교류, 인적 교류, 사회문화적 교류는 증대되어야 한다.

C. 언론 보도 경향의 개선책

- (1) 양국 언론의 보도 경향에 대해 서로가 체크하고 자기성찰을 할 수 있는 ‘미디어 상호 검증 (Media Review) 제도’가 제휴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 (2) 상대국 지식인들에 의한 논단 및 시론, 인터뷰를 늘려 불필요한 오해와 인지 부족을 줄일 필요가 있다.
 - 고정 칼럼니스트제도, 기사 옴부즈만 제도
- (3) 제휴사 신문/보도에 정기적으로 ‘오해와 진실’ 내지 ‘사실과 보도’ 페이지 마련
- (4) 국내에서 ‘특파원 간담회/방담회’ 교환 개최

4. 2015년을 향한 준비

한일관계의 궁극적인 개선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에 대한 재인식과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인식의 공유, 나아가 비전의 공동 설계가 필요하다.

A. 양국 현안의 적정한 관리와 해결

- (1) 불필요한 망언의 자제
- (2) 양국 간 현안이 되고 있는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타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 문제는 피해자들이 생존해 있는 기간 내에 피해자 본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의 해결이 바람직하다.
- (3) 영토문제는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고 현상변경을 시도하지 않으며 문제를 축소지향적으로 관리한다는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

B. 2015년 ‘신한일 공동선언’ 준비

- (1) 1965년 기본조약의 정신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무라야마담화,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의 연장선상에 서서 신뢰에 바탕을 둔 양국 교류 심화 방안 모색 (deepening)
- (2) 한반도 통일에 대한 비전의 공유 및 지역 및 국제사회에 대한 공동 공헌을 담는 동심원적 확대지향적 협력 모색 (enlargement)

일한 관계 미래상 모색 (경제적 측면에서)

1. 전통적 기능 어프로치의 한계 : 반일 감정의 일시적 방치 + 일본 기술 의존도와 수출 주도형 성장 (극일(克日) 논리) 、 반일 감정의 봉합 + 대한(對韓) 협력 (냉전사고)

- (1) Mbnomics 와 정치적 귀결 : Anything But Japan Globalism (원안개입, 법인세 우대, 전기보조와 자원개발, 대형 FTA 체결, 약한 환경 Compliance 로 국제 경쟁력 강화, 일본 따라잡기)

- ☞ 정부주도 · 제조수출주도 · 「재벌」 주도의 성장 달성
- ☞ 정부의존, 환율 Rate 의존의 가격 경쟁, innovation disincentive
- ☞ 독도방문, 「일본의 힘은 약해졌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 」

- (2) ABEnomics와 정치적 원동력 : Anything But DPJ Globalism (대담한 금융 정책, 기동적 재정정책, 성장 전략) , 한국의 이해는Anything But MBnomics (円安유도, 법인세 인하, 전력 재편, TPP/EU EPA, 환경 일시적 방치)

- ☞ 디플레이션 탈피, 재해부흥, 재정재건, 경쟁 조건 정비등으로 포괄적 Global 전략 추진
- ☞ 성장 전략은 기존권과 투쟁 (암반규제 : 농업, 의치료, 노동시장)
- ☞ 강한 경제 재구축이 최우선 (외교력의 기반은 경제력, 암반 돌파의 정당성)

- (3) Geunhyenomics란 무엇인가? : MBnomics + DPJnomics? 「창조경제」를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Innovation의 Risk는 누가 담당하는가? 재배분과 성장 관계는 무엇인가?

- ☞ 보이지 않는 일본의 자리매김 (모순 : 바뀌지 않는 경쟁관, 바뀐 우열관)
- ☞ 명확하지 않은 중국의 자리매김 (모순 : 바뀌지 않는 시장지망, 바뀐 위협감)
- ☞ 열어져 가는(희박화) 미국의 존재

2. 일치하지 않는 세계관

- (1) G2의 세계관 : 미국의 잠재력 vs. 중국의 잠재력 판단차 (인구 동태, 환경제약, 이노베이션의 힘, 통화신용) 、 냉전 잔존의 한반도 지정학 vs. 다극형 세계관(시장구조) 、 권력 > 룰 vs. 권력 < 룰

- (2) 국가 자본주의와의 거리 : 공기업의 프레젠, 독점금지법 운용, 관치금융, 기관 투자자의 부재, 지방분권의 확립, 국가 공무원의 사회적 지위, 처부패compliance

- (3) 인구 제약론 : 초고령화 사회의 경험, 자원위기 경험, 플로 경제 vs. 스톡 경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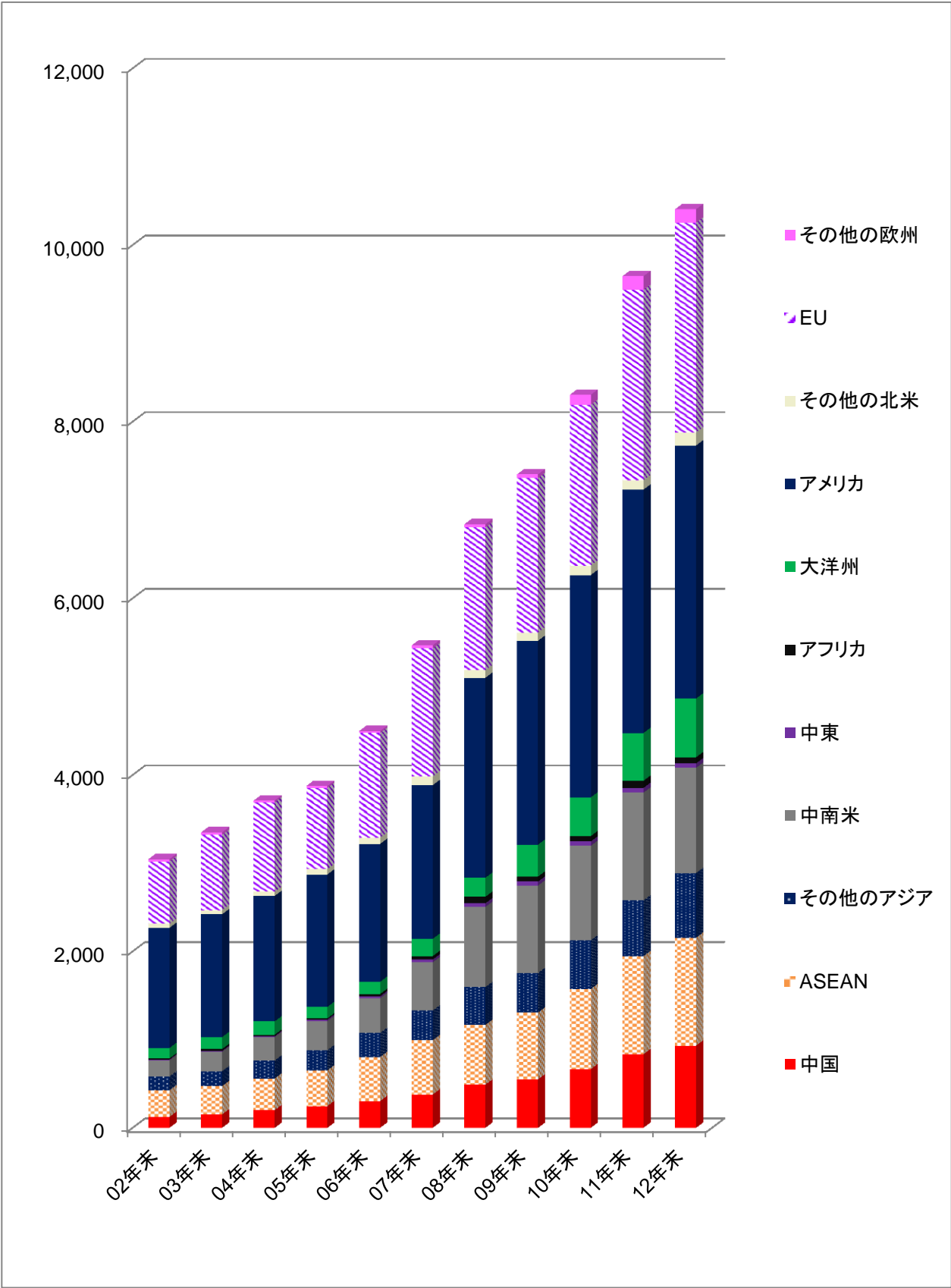
3. 새로운 잠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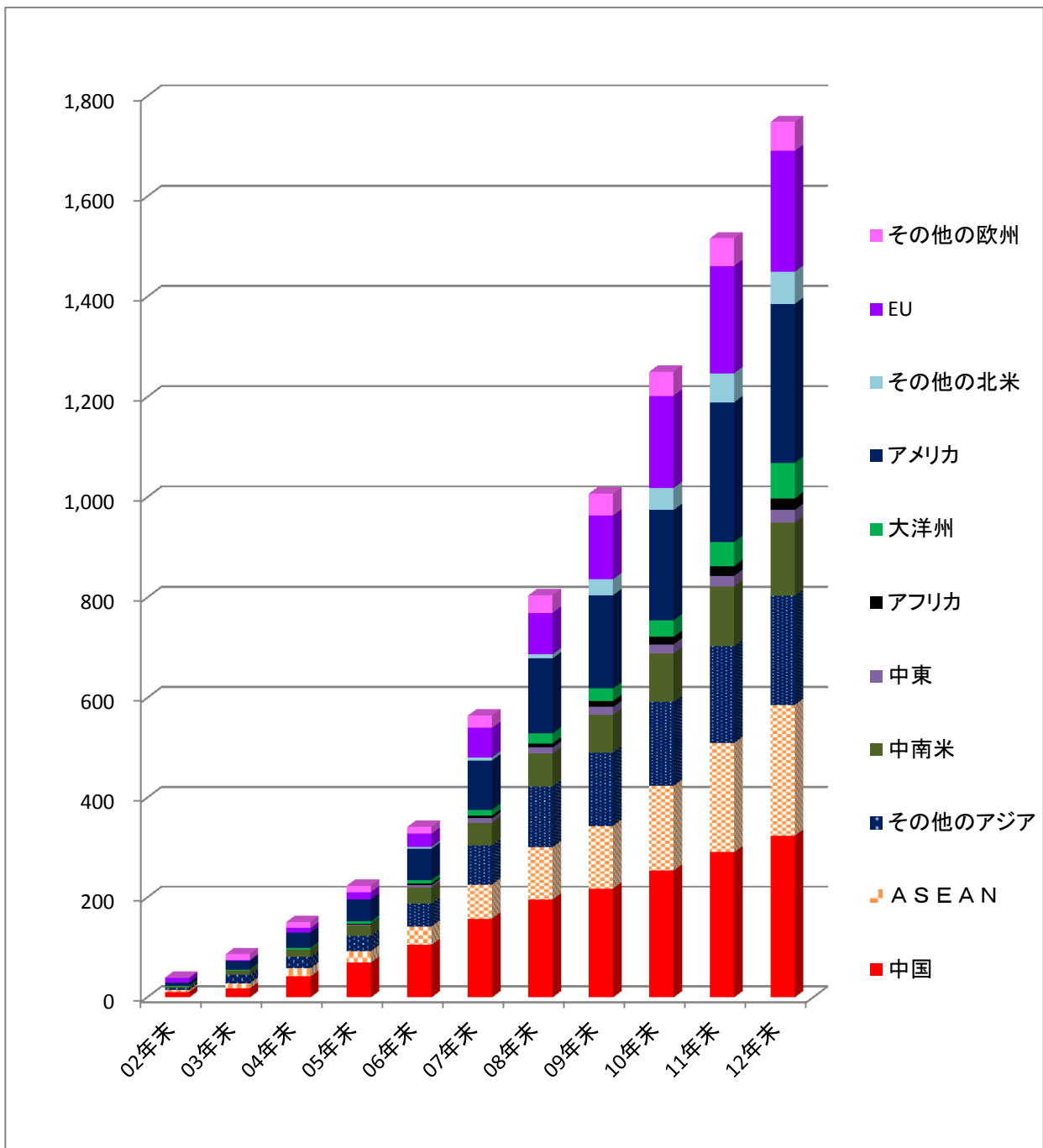
- (1) 한국·전통 경제정책의 본질적 모순 : ①국제 경쟁을 지지하는 정부·「재벌」관계와 정치적 반「재벌」정책, ②Global화 전략과 강한 국경의식 (금융Hub와 환율 안정 추구, 2국간 FTA의 집착, ③제2의 일본 경제가 된 일본을 탈피 (대일 무역 적자)
- (2) 공통기반 : 국경을 무시한 산업 집착 (전기전자 / 자동차 / 기계에서 환경까지)
- (3) 경쟁기반 : 경제 특구와 전략적 외압활용 (규제 완화, 기득권 교섭에 선행 성공사례를 이용, 시장 외함을 강화, 직접투자의 활성화 : 건강·의치료, 농업, 에너지)
- (4) 보완기반 : 기술적 선행 분야의 교환과 시장특성 (IT, 신교통 시스템, 빅 데이터 등의 시스템, 공공 서비스)
- (5) 요소기반 : 인적자원과 지적 자산 스톡 (관광, 문화, 개인 서비스 벤처, 지방간 교섭)

4. 新사고로의 과제

- (1) 일본 : 글로벌화의 Commit, Down-sizing 의 외교, 정보 발신력의 강화
(무엇을 한국에서 받아 들여야 하는가 : 대국 게임은 끝났으며, Global trend 품
파악하기=한국 시장의 가치, 오픈·표준화 전략을 도입, 유학추진과 영어 능력)
- (2) 한국 : 성장전략의 확정, 모순된 사고의 정리, 법치의 침투·심화 (일본에서 무엇을
얻는가 : 고용과 인구 고령화의 직시, 준법의식의 차이 인식, 정책 과학 > 감정론의
정책 결정)

(참고) 그림 1. 일본과 한국의 직접투자 잔액의 지역별 내역 (일본 : 단위 억\$)





(한국 : 단위 억\$)

출처 : 재무성통계 및 한국 수출입 은행 통계를 참고로 작성

그림 2. 일본의 직접투자 내역

(収益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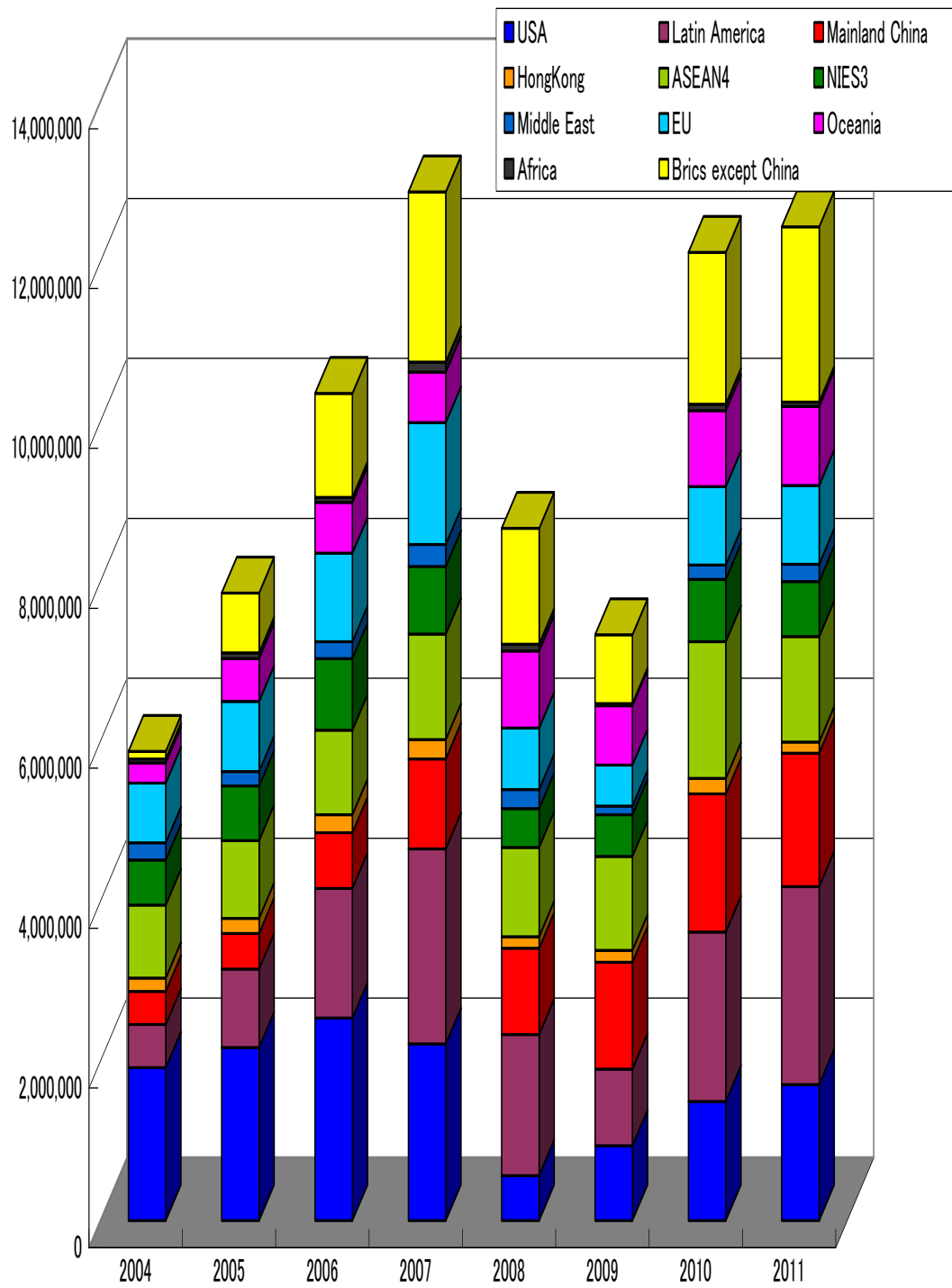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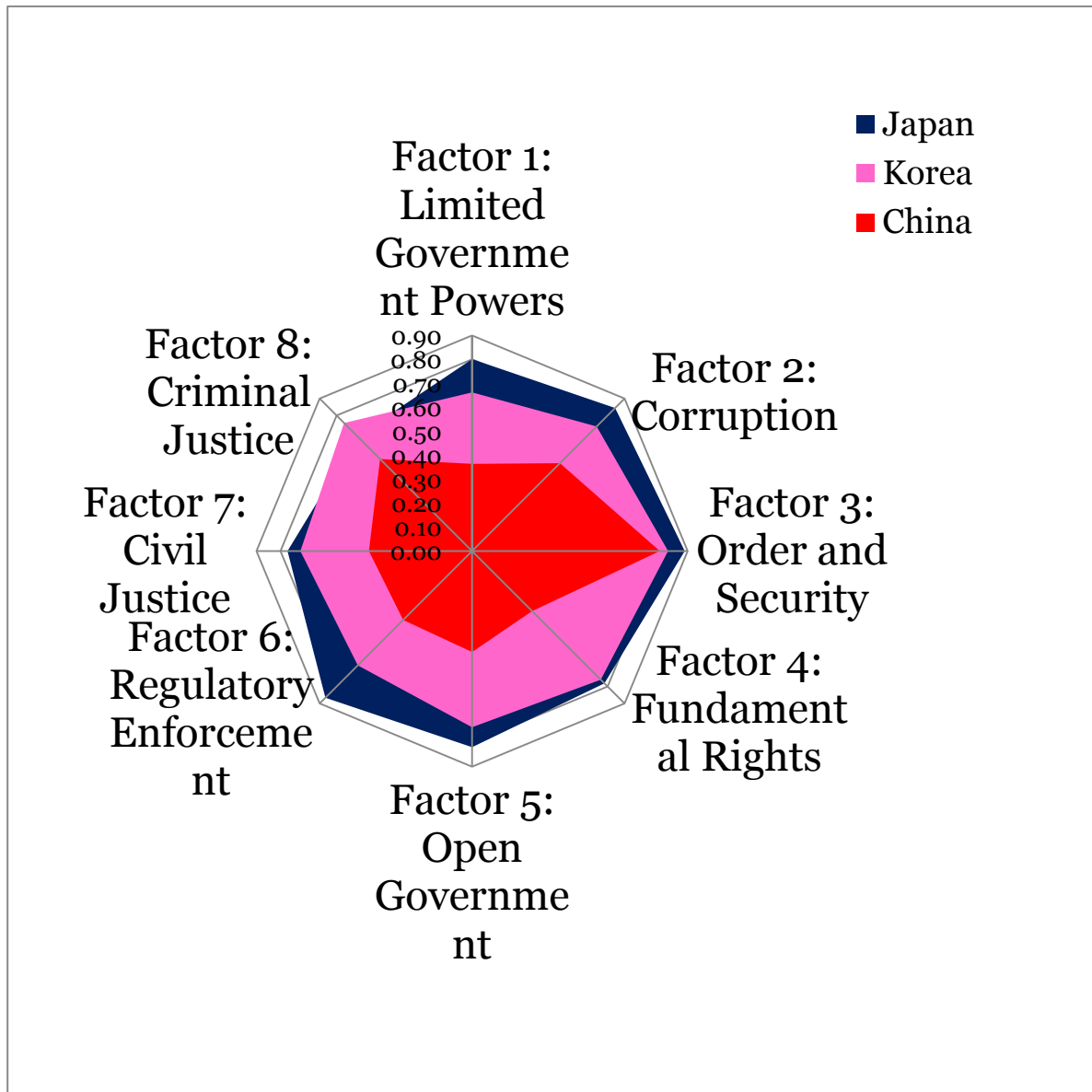


그림 3. 한중일의 법지배도 비교 (The World Justice Project 2012-13)



세션3: “한일교류의 현황과 미래—사회, 문화, 청년교류”

한일 교류의 현황과 미래 - 사회/문화 교류, 청년 교류

1. 침체되는 사람의 흐름과 상호간의 '바라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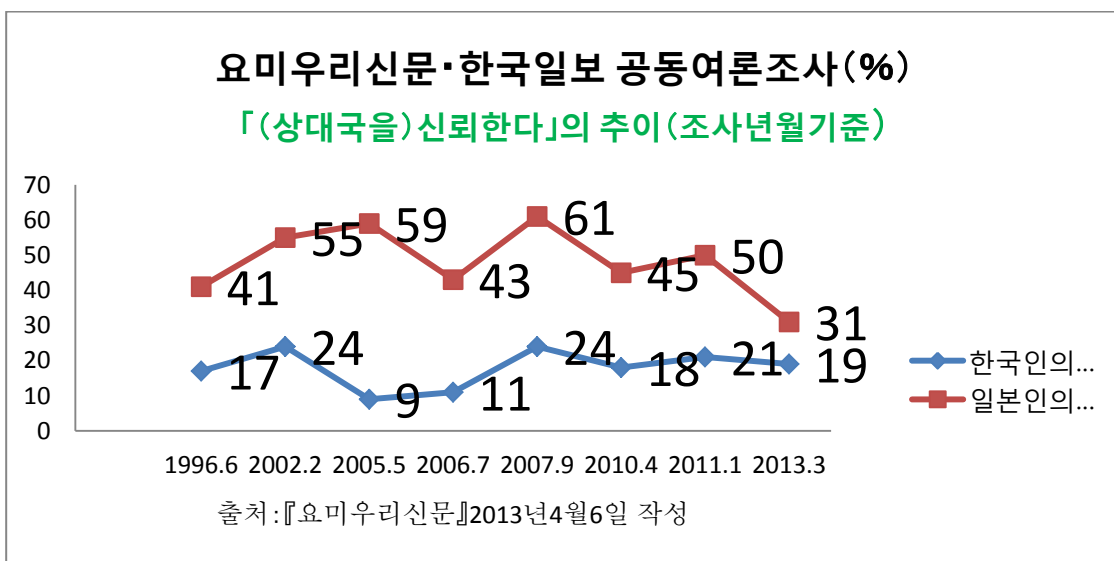
- 2013년에 들어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방문자는 증가했으나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 방문자는 급감했다. 8월 이후부터는 한국인의 일본 방문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일본인의 방한자 수와 한국인의 방일자 수 (2013년 1~8월)

月	일본인의 방한자 수		한국인의 방일자 수	
	방한 (명)	전년 대비(%)	방일 (명)	전년 대비(%)
1	206,474	- 15.5	234,456	35.5
2	217,153	- 26.2	234,390	38.7
3	288,900	- 19.9	206,946	37.7
4	202,529	- 32.2	204,229	34.1
5	222,936	- 29.6	228,670	45.5
6	201,163	- 33.5	211,465	39.0
7	208,219	- 30.5	244,000	28.6
8	270,582	- 22.0	215,600	6.9
1~8	1,817,956	- 26.2	1,779,756	32.3

출처: 일본인의 한국 방문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한국인의 일본 방문자수는 일본 정부 관광국 ‘일본 방문 외국인 수(2013년 8월 추산치)’로 작성. 한국인의 일본 방문자 수 중, 1-6월은 잠정 수치이고 7-8월은 속보 수치임.

-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일본인의 한국관과 한국인의 일본관에 있어서 ‘바라보기(view)’가 매우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왜 사람들(citizen) 사이에서 '교류'보다 '갈등'이 두드러졌는가

① 국가 지도자 등 '관(官)'의 행동과 발언의 파급 효과

최근 1 년간 한일 양국간에는 상대국 정부를 의식한 government-to-government 언동이든 내정적인 언동이든 결과적으로 government to citizen 차원의 메시지가 되어 상대국의 시민이 자국에 대해 부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갖게 되는 일이 지나치게 많았다.

[한국의 '관'=>일본]

2012 년 8 월 이명박대통령(당시) 다케시마/독도 방문, 천황 발언.

2013 년 3 월 대전지법, 쓰시마에서 도난 당한 불상의 반환에 관해 이전 금지 가처분 판결.

2013 년 5-6 월 박근혜 대통령 방미, 방중 시 대일 비판 발언.

[일본의 '관'=>한국]

2013 년 4 월 아베 총리가 무라야마 담화와 관련해서 '그대로 계승하는 것은 아니다' '침략의 정의는 국제적으로도 정해져 있지 않다' (5 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아베내각으로서 침략 사실을 부정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전체를 계승한다'고 수정)

2013 년 7 월 시모무라 문부과학대신이 축구한일전 현수막에 관해서 '그 나라의 민도가 의심된다'고 발언

② 매스미디어 보도의 영향

[인터넷에서 지적된 일본 미디어의 예]

<그런 한국에서 지금 일본인이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다. 다음은 내가 한국에 거주하는 여러 일본인으로부터 들은 최신 정보다. 찬찬히 읽어 주기 바란다. '서너 명의 "일본인 사냥꾼" 젊은이들이 야구 방망이 등을 들고 거리를 배회한다. 들키면 "독도는 어느 나라 영토냐?" "위안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며 시비를 걸어온다. 무서워서 거리를 다닐 수 없다' '음식점에서도 일본인이라는 걸 알면 태도가 짝 바뀐다. 심지어는 한국인 손님이 시비 걸며 욕을 한다.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일본인의 한국 탈출이 시작되었다> (산업경제신문 도쿄본사[産業經濟新聞社東京本社] 발행 '석간 후지[夕刊フジ]' 2013 년 7 월 7 일자에 실린 어느 저널리스트의 기사)

※ 반증: <딸 부부와 함께 한국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중략) 일본인은 환영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러한 불안감을 짝 바꿔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학생으로 보이는 사람 5, 6 명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몰라서 전화로 여러 군데 물어봐 주었습니다 (중략) 일본에 돌아와서 이 얘기를 친구들에게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뉴스 등을 통해서 접하는 한국과 내가 여행에서 경험한 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아사히신문[朝日新聞]' 2013 년 8 월 27 일에 게재된 오사카에 사는 75 세 남성의 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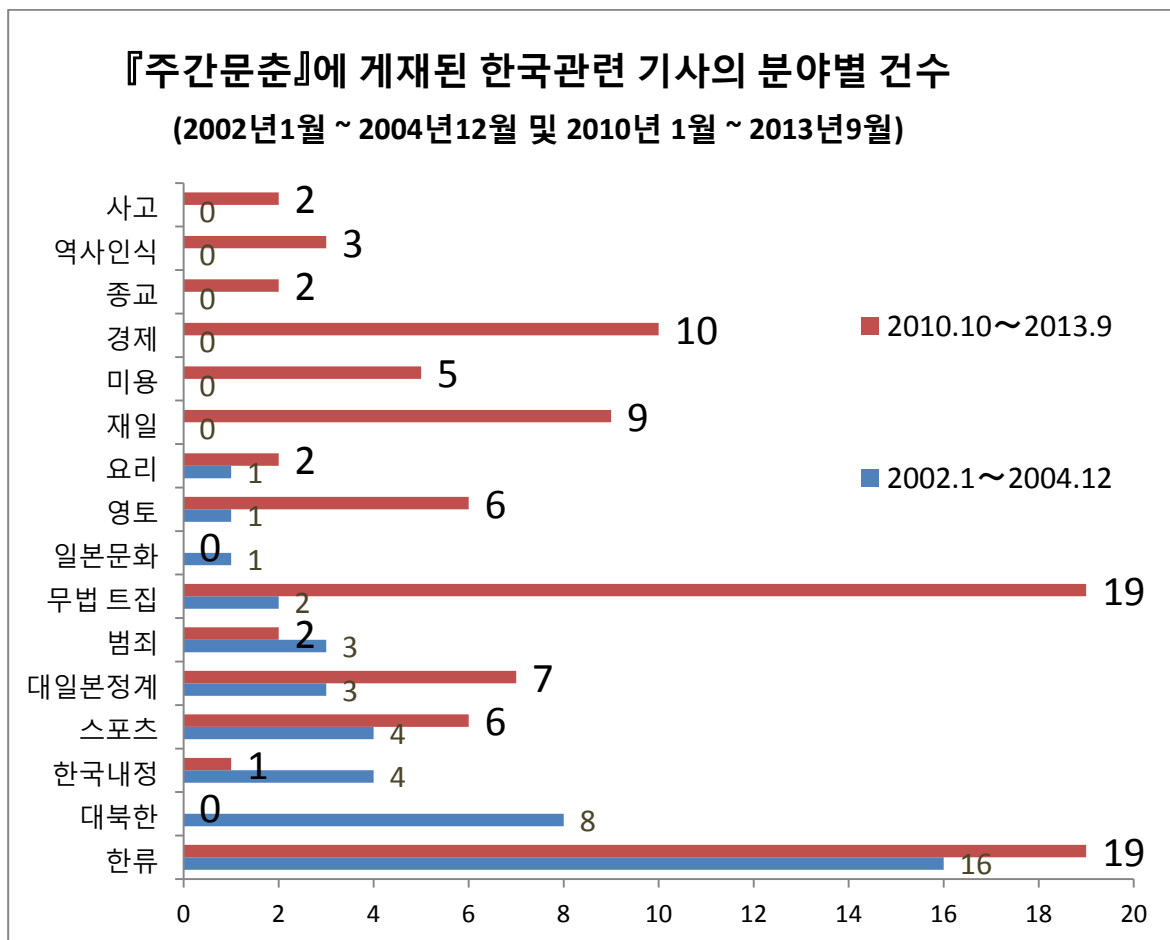
[인터넷 상에서 지적된 한국 미디어의 예]

<아사히(朝日) 신문, 산케이(産經)신문과 NHK 등 일본 언론은 일제히 이 내용을 보도하며 "FIFA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관중석에 욱일승천기도 등장했다는 사실은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조선일보' 2013 년 7 월 30 일자에 실린 축구 동아시아컵 한일전에서 한국측 응원단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도 적힌 현수막을 내건 사건에 관한 기자의 기사)

※ 반증: <한편, 일본측 응원석에서는 경기 시작 즈음에 욕일기를 한 때 내거는 장면이 있었는데, 안전요원에 의해 제지되었다. 욕일기는 한국에서는 2 차대전 전 일본의 침략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욕일기에 대해서도 'FIFA 규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 2013 년 7 월 29 일에 게재된 이 사건에 관한 기자의 기사)

3.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일본의 '혐한' 감정의 확산

- 최근의 '혐한' 담론을 이른바 '우경화'의 연장선상이나 전통적인 '조선인 차별' 의식의 측면에서만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질적으로 위험 수위?)



-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법치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무법적 언동과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 대해 트집잡는 나라 또는 민족으로 취급하는 '무법 트집'으로 분류될 만한 기사가 급증했다.
예: 야스쿠니 신사의 방화를 인정한 중국인 용의자를 '정치범'으로 판단하여 일본에 인도하지 않기로 한 고등법원 결정(1 월), 박근혜 대통령의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는 발언(3 월), 연이은 일본 정치가 비판, 쓰시마 불상 이전 금지 가처분 판결(3 월), 징용공에 대한 배상 명령을 내린 고등법원 판결(7 월), 도쿄올림픽 결정 직전에 후쿠시마산 등 수산물 금수 조치(9 월) 등.

- 한국이 '민(民)'뿐 아니라 '관(官)'까지 합세하여 '무법'과 '트집' 을 부리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일본 사회의 법규범성에 비출 때 충격이 크다.
- 최근 10 년간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바라보기'는 한류라는 정(正)의 유인가(誘因價)를 가진 대상으로 접근(approach)해 왔으나 '불법, 트집'을 연상시키는 부(負)의 유인가에서 멀어지는 회피(avoidance)로 향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 한국 미디어의 일본어 인터넷판에 접속해서, 한국 사회를 '비정상'적으로 느끼게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나 범죄와 관련된 기사, 황당무계한 일본론과 공평하지 못한 일본 비판 기사 등을 퍼 나르는 '험한' 담론이 적지 않다.
- 한국의 일부 미디어가 대일관계의 의제 설정기능(the agenda-setting function)을 주도하는 측면이 있으며, 일면적인 '우경화' 비판 보도가 연일 계속되면 박근혜 정부로서도 일본과의 돌파구를 찾기 어려워진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대로 계속 강경일변도의 대일 자세를 취한다면 결과적으로 일본에서 '험한' 담론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4. 교류의 앞날의 명과 암

- **【양국 정계(政界)가 신경 써야 할 것】** 국가 지도자나 정치가가 역사 인식이나 영토를 둘러싼 견해를 피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단지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국 정부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시민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원래 상대국 시민 중에는 자기나라에 대한 이해자나 이해관계자가 다수 존재하므로, 그들을 적(敵)으로 만들면 결과적으로 국익에 반하게 될 것이다. 아베 총리는 한국 국내의 일본 이해자를,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 국내의 한국 이해자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 **【양국 미디어가 신경 써야 할 것】** '한일/일한 관계'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말하지만 그런 것은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신문이나 TV보도에서 말하는 '한일/일한 관계'가 나쁘다고 해서 국제 결혼한 한일커플들의 이혼율이 늘거나 하지는 않는다. 도쿄에서 먹는 한국음식의 맛이 나빠지는 것도 아니다. 서울에서는 일식 계통 패스트푸드점이나 이자카야가 대유행이다. 일본 편의점에는 김치, 나물, 고추장, 한국 김이 있고, 한국 편의점에서는 일본제 맥주나 담배가 잘 팔린다. 먹거리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 관계는 과거 어느때보다 양호하다.
- **【교류 관계자가 알아야 할 것】** 상호간의 '바라보기'가 악화된 것을 생각하면 풀뿌리 교류나 문화 교류를 과대평가해서는 안된다. 아무리 문화교류가 활발해져서 양국간의 분위기가 호전되어도 양국간의 정치, 외교관계가 안정되지 못하면 기존에 쌓아왔던 것도 무너지고 다른 교류도 침체되기 마련이다.
- **【한국정부가 알아야 할 일】** 2012년 전반까지는 한류 효과로 인해서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혁명적으로 호전'되었으나 '험한으로 전략'시켜 버렸다. 일본의 대학교에서는 한국어를 이수하려는 학생들이 감소했다. 이는 한국의 대일 외교에 기인하는 일이며, 한국의 국가 브랜드(Nation Branding)와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의 큰 실패임을 인식해야 한다.
- **【일본정부가 알아야 할 일】** 일본 정부는 자국 국민의 다수 조차 납득하지 못하는 후쿠시마 제1원전 문제(※)에 대해 해외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인의 일본 방문자 수가 감소할 수도 있다. 한국인들은 정치적인 대일 자세를 일상 생활에서의 대일

행동(식사, 여행, 오락)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방사능 문제는 매우 안타깝다.

※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아베 수상의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다" 발언에 대해, "위화감을 느낀다"는 대답이 82%, "타당하다"는 대답이 13%였다> (‘니혼케이자이 신문(日本經濟新聞)’ 9월30일자 여론조사)

- **【청소년 교류에 대한 기대】** 홈스테이나 학교 방문 등을 포함한 잘 준비된 환경 아래 청소년교류사업에 참가한 한국 젊은이의 일본인관, 일본 젊은이의 한국인관이 '일면적'이지 않음이 실제로 증명되고 있다. (단순한 개인적인 방문 경험과는 다른 효과가 있다). 한일 젊은이들의 '바라보기'가 양호하지 않다. JENESYS Program (Japan-East Asia Network of Exchange for Students and Youths)과 같은 프로그램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3만명 규모로 아시아 대양주 국가 및 지역에서 'JENESYS 2.0' 실시 중). 기존의 '우호 친선, 상호 이해형 교류' 이외에 환경, 자연 파괴, 빈곤, 개발, 인권, 에이즈, 재해, 출산을 저하, 고령화 등 비정치적인 공통과제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한 '공존형 교류' 일정을 도입하면 정치적인 문제는 상대화될 것이다.
- **【상대국에 자국 문화의 팬이 많이 있다는 사실】** '한일축제한마당 2013 in Seoul'(9월15일)에는 전년보다 많은 약 4만5천 명이 참가했고, 'in Tokyo'(9월 20일)에는 작년의 거의 2배인 약 5만 명이 참가했다. 일본에서는 열광적인 한국드라마 팬, K-POP팬이 있으며, 한국에도 꾸준한 일본 드라마 팬(이미 '한자와 나오키'가 인기를 모으고 있다)이 있다.

[끝]

한일 청년 교류 -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이 필요하다

1. 탈역사 세대가 주류로

-아베 총리 등 일본의 신주류는 “과거사에 대한 재해석”을 본격적으로 추진. 한반도 강점,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에 대해 일본의 존립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 혹은 영광의 역사였으며, 이는 비난 받아야 할 역사가 아니라는 식의 역사 수정주의 인식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기 시작했다.

-일본사회의 전체적인 인식은 아니라고 해도 상당수 주류 세력의 역사인식이 고노담화, 무라야마 담화가 발표된 1990 년대와 다른 식의 역사인식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음.

-이는 피해국가인 한국과 중국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역사인식임. 장기간의 갈등을 예고함.

-일본의 청년층들 사이에 과거사에 대해 기성세대의 역사 수정주의적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도 “우리 할아버지, 선조의 잘못에 대해 왜 우리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느냐”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 주류세대와 비교해 청년층은 적극적으로 과거의 인식 수정을 피하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정치·미디어가 주도하는 역사 수정주의의 영향에서 벗어나기는 힘들어.

-일본의 근본적 변화는 중국이라는 신흥강국의 부상, 영토갈등에 따른 내셔널리즘 고양이라는 필요성이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임.

-젊은 층도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핍박 받는 일본’이라는 인식이 점차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한국이 중국과 손을 잡고 일본을 핍박하고 있다’는 식의 이미지를 갖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됨.

-일본군 강제동원 위안부 등 역사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죄하자는 집회 등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노년층의 역사세대가 많음. 일본 내에서도 역사인식을 둘러싼 갈등이 나타나고 있음.

2. 일본의 청년, 역사 무관심 세대

-대학생 등 젊은 층은 일본의 기성세대에 비해 역사 문제에 관해 상대적으로 무관심함. 기성세대는 국가의 자부심 문제 등 내셔널리즘, 과거의 영광재현에 관심이 많음. 하지만 무관심 세대는 장기불황, 고령화에 따른 국가부채 증가, 비정규직 증가 등 당장 생활상에 직면한 문제로 인해 기성세대와 달리 과거의 영광의 재현이라는 주제에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관심이 낮음.

-젊은 층들은 한류 등 한국의 문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 새로운 문화를 향유하겠다는 생각임.

-와세다 대학도 한국어수강생이 연간 2000 명 정도가 될 정도로, 한국 문화 등에 대해 관심이 높음.

-한일 역사 갈등에도 불구하고 k-pop 등의 수요는 일정 정도를 유지하고 있음. 기성세대가 참가하는 한국 단체관광은 줄고 있지만 개인관광은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없음.

-하지만 역사 무관심 세대도 역사문제에 대해 한국과 동일한 인식을 요구할 경우, 이질감을 강하게 느낌.

-역사 무관심세대도 일부는 불황의 장기화, 사회 불만이 외부로 향할 가능성도 존재함.

3. 글로벌 경쟁과 한국 젊은 층

-한국의 젊은 층도 평소에 역사문제 등에 대해 기성세대와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짐. 글로벌 경쟁을 강조하는 한국사회 분위기로 인해 역사문제•주변국과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기성세대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임.

-일본의 한 TV 가 무작위로 길거리 인터뷰를 했는데, “일본의 j-pop 아이돌 그룹 아라시를 좋아해서 일본에 유학을 왔다”는 식의 반응을 보인 젊은 층도 있었음. (일본문화에 대해서도 역사 인식을 배제한 채 글로벌적 관심의 하나로 표출됨)

-한국에서도 일본 문화 팬들이 존재하고 있음. 일본의 애니메이션, 노래, 소설에 대해 역사, 정치문제와 관련 없이 좋아하는 젊은 층은 많아

-와세다 대학에만 1000 여명이 유학할 정도로 일본에 대해 관심도가 높음.

-일본의 일부 TV, 언론에서는 “한국은 초등학교에서부터 독도 문제 등과 관련 일본에 적개심을 주입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지만, 한국의 젊은 층이 모두 그런 식의 의식으로 무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한국청년층의 문제는 글로벌화에 따라 관심의 대상이 미국 등으로 확산되면서 일본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임. 일본에 대한 관심이 점차 ‘마니아’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와. 80~90 년대에 ‘재팬 넘버원’시대와 비교하면 일본어를 배우는 사람도, 일본의 기업, 일본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 급속도로 줄어들어.

4. 젊은 층을 감안한 공공외교관

-마이니치 환경상 등에 참여한 양국의 젊은이들이 환경, 문화 등 정치•역사 문제와 분리된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 이해도가 높고 대화의 장벽이 없었음. 그러나 역사•정치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 상호인식의 차가 드러남

-청년 교류를 통해 정치•역사 문제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킬 필요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를 해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아.

-정치•국가 차원에서 양국 간의 갈등을 인정하고 장기적인 목표로 이를 관리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함.

-정치 역사 인식의 갈등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경제•문화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교류와 확대하는 것이 중요함.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일 청년층의 교류는 확대할 수 있는 여지는 많아. 최근 일본에서 “한국이 민주주의적이지 않다”는 식의 편향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어.

-일본은 중국에 대해 양국의 역사인식의 차이에도 문화와 경제 교류를 중단할 수 없다는 인식과 정책을 보여주고 있음.

-상대방 국가의 정책, 정치인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비판할 수 있지만, 일반 국민의 인식 변화를 강제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어.

-한국의 정책당국은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장기화를 전제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의 강화, 역사•정치와 문화•경제 분야를 분리해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함, 이는 일본 역시 마찬가지임, 한일관계의 악화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익에도 장기적으로 손해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필요함.

-특히 요즘 젊은 층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한국이 중국과 손잡고 일본을 핍박한다. 는 식의 이미지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한국은 그럴 이유도 필요도 없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

세션 5: 차세대의 주역 젊은 학생들과의 대화(특별세션)

한일 관계의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과 그 대응방안 모색

■ 한일 관계의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

<경과>

1965년 국교정상화~: 정치·경제 관계를 축으로 진전

1988년 서울올림픽~: 일본의 對韓 인식 진전, 민간 교류의 활성화

2002년 월드컵 축구~: 일본의 對韓 친밀도 심화, 韓流 확산 본격화

2010년 한일합병 100년~: 일본의 對韓 친밀도 후퇴, 정치 관계의 냉각

<현재>

· 정부 간 관계의 기복과는 무관하게 민간교류의 물줄기는 굽고, 對韓 인식이 안정됐던 과거와는 달리 아베 총리의 재등장 이후 양국 간의 냉랭한 정치 관계가 이제는 민간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

· 최근의 정치관계 냉각이 우려할 만한 것은 적절한 해소 계기를 찾기 어렵다는 데 덧붙여 정부 및 민간 관계의 악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악순환 구조로 빠져들어가는 듯한 모습 때문. 과거처럼 하나가 다른 것을 억제해 주는 효과를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움.

■ 대응 방안의 모색

<문제 제기>

· 현대 민주정치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포퓰리즘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워. 국민의 적극적 반대가 없는 한 한일 양국 정부가 현재의 냉담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 그 경우 국민 사이의 호감이나 반감 등 상대국 인식도 후퇴가 거듭될 전망. 국민 사이의 인식과 교류가 정치관계 악화를 강화하는 악순환 구조가 정착될 경우 최종 피해는 양 국민이 깊어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국민 차원, 특히 과거의 강요된 인식구조에서 자유로운 젊은 세대 차원의 개선 또는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

<검토 과제>

1. 한일 간 갈등이나 불편한 상대국 인식의 근저는 역사에 대한 시각 차이. 양국에서 각각 극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역사 및 사회 교육의 문제. 교육 과정이나 교과서 문제는 청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바로잡기 어려워.

2. 다만 청년기는 기존의 사회가 강요하려는 역사 및 사회인식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특권의

시기. 무엇이 가치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기.

3. 현재 양국의 역사 및 사회 교육 목표는 크게 보아 19세기 국민국가 형성 당시의 국민건설, 국가건설 단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실정. 한국, 일본을 강조하는 교육. 그러나 적어도 반세기 전부터 이런 국가·국민·민족주의 중심의 교육과 그에 따른 개개인의 대(對) 사회 인식의 제약은 좀더 고양된 목표인 ‘자립적 개인’과 ‘국제주의적 평등 의식’의 조화를 향한 교육과 인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라. 한일 관계의 문제도 그 근본이 인식과 태도의 문제라는 점에서 국가의 교육 방향과 그 수용 형태의 변화를 생각해야 할 때.

<대안>

1. 현재 한일 양국의 역사 교육의 중심이 국사에서 출발해 동양사, 세계사로 뻗어가는 방식을 고쳐, 거꾸로 세계사, 동양사, 국사로 바꿔볼 수 있을까.

2. 지리나 공민(정치경제) 교육에서는 동네, 기초단체, 광역단체, 국가, 세계로 넓히는 현재 방식을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3. 이런 역사, 사회 교육의 필요성은 기본적으로 낮은 인식 틀인 국가·민족주의의 감염을 피하고 청년 개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행복에 중요한 조건이 되지 않을까.

4. 청년기의 특징인 순수한 지식에 대한 열정(본래적 의미의 Philosophy)에 비추어 단순한 지적 호기심의 충족을 위해서라도 국가가 강요한 인식 틀에서 벗어나 보려는 자기노력은 모든 청년들에게 가능하지 않을까.

5. 그 경우의 가장 좋은 방법은 각종 역사 문제에 대한 상대국의 인식을 우선 배척하고 보기 전에 잠시 호흡을 가다듬어 입장과 처지를 바꾸어 ‘왜, 무슨 까닭?’을 따져 보려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가 기본 아닐까.

6. 그런 고려 대상은 술하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독도, 일제 식민지 정책의 성격, 군대위안부, 강제동원, 식민지 경제발전, 교과서, 평화헌법 개정 및 집단적 자위권 인정 등의 쟁점을 하나하나 따져보자. 결과적으로 상대국 입장에 동조하기 어렵더라도 상대의 인식을 더듬어 일정한 이해를 한 뒤의 반대는 무조건 반대와는 그 밀도가 크게 다를 수밖에 없어.

7. 그런 과제가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주어져 있듯, 일본 대학생들에게도 던져졌다.

‘한일관계에 관해 청년들을 향한 스피치’ 레쥬메

이 스피치에서, 발표자의 학생시절 회상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자로서의 활동을 통해서 한일관계에 대해 체험한 것과 생각한 것을 청년들에게 들려주려 한다.

▽ 개인적인 회상, 한국과의 접점

- 1979년 박정희대통령 피살
대학생 때 학교식당에서 친구로부터 듣다.
- 1985년 한국 여행
NHK 한글 강좌
88년 올림픽을 앞 둔 한국에 대한 관심이 고조

▽ 베를린에서의 체험

- 1989년 ‘베를린의 벽’의 붕괴
- 1990년 동서독의 통일
냉전 종식. 국가가 반드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대감 고조
2000년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한다’고 내걸었지만 한국은 아직도 분단국가이다.

▽ 김대중대통령의 방일(1998년)과 한일공동성언(일본측은 식민지 지배에 의한 ‘손해와 고통’을 사죄. 한국측은, 전후 일본의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공헌을 평가)

-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 일본의 한류 붐

▽ 한일관계의 변천, 현황을 냉정 후의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생각하고자 한다.

냉전 종식 후 약 20년간 (대학생 여러분이 태어나 자란 시기)은 글로벌화(국경을 넘어 사람, 물건, 돈, 정보가 오가는)시대

한국: 글로벌화에 적합. 글로벌화는 경제력이나 국제적인 지위 향상이 가능한 역사적인 기회(정부, 기업, 국민에게)

북한: 글로벌화의 거친 파도 속의 외딴 섬

일본: 글로벌화 속에서 설 자리를 찾지 못함.

▽ 글로벌화된 세계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님. 국제사회에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을 것임.

▽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의 역사(일본 역사, 세계사, 그리고 일본과 한반도 관계)에 대해서 폭넓은 관심을!

-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
- 1965년의 한일국교정상화

<*본 보고서의 모든 보고자료는 원본/번역판을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회의당일에 배포된 것을 그대로 게재하였다. 단, 보고서의 취지에 따라 발표자명을 삭제했으며 단순한 번역상 오류 등에 관해서는 수정을 가하였다.>